

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2010. 12

정재호 · 이홍식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200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거대 경제권이고 우리나라와도 교역이 활발한 미국과 EU와 FTA를 체결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미 FTA와 한EU FTA 발효는 지금까지 체결한 어떤 FTA보다 우리나라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었을 때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산업별로 FTA 발효로 인한 무역전환효과의 발생 여부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교역 특징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가 예상되고, 한EU FTA로 인해서는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효과와 함께 무역창출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론적으로 FTA가 발효되었을 때 FTA 비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낮추는 것이 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관세율 변화보다는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면서 중심관세율 구조의 장점을 활용하여 FTA 체결에 따른 개별 산업별 무역전환효과를 감안한 일부 관세율 조정을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박사와 고려대학교 이흥식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공주대학교 박순찬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영관 박사, 고려대학교 강문성 교수,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논평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

게도 감사를 표하며, 저자의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많은 노고를 한
김용대 전문연구원, 최미영 주임연구행정원, 그리고 원고교정을 맡아
준 출판팀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FTA 정책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적정한 관세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FTA는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충격이다. 우리나라 관세율이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가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과 일반 실행세율과의 조화를 위한 관세율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거대 경제권이고 우리나라와도 교역이 활발한 미국과 EU와 FTA를 체결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미 FTA와 한EU FTA 발효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보다 우리나라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EU와의 FTA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이론적으로 FTA 체결 이후 FTA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관세(external tariff)는 낮추는 것이 최적의 관세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관세수입에 대한 경쟁, 생산자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해 결국 대외관세를 낮춤으로써 무역전환효과를 줄여 국가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Bagwell and Staiger (1997)는 이런 효과를 tariff complementarity effect로 명명하였고, 특히, 대외관세를 낮추는 tariff complementarity effect는 관세동맹(CU)보다는 FTA에서 더욱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FTA가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FTA 이후 자국의 관세율을 조정한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FTA 체결에 적극적이고 지역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교역비중이

80%를 넘고 있는 칠레의 경우 그동안 7% 균등관세율을 부과하다가 2003년에 관세율을 6%로 1%p 인하하였다. 그 외 미국,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 중 전체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한 국가는 없다. 그 이유는 FTA 체결국들과의 교역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미국은 NAFTA 체결 당시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효과인지 구분이 불분명하다. 또한 현재 DDA협상이 진행중인 것도 중요한 이유로 생각된다. 현재 DDA협상의 지지부진함을 FTA 추진으로 충족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직 자국의 교역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과의 FTA가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DDA협상 이후 관세율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세를 인하하기보다는 DDA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으로 추측된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구조변화 논의에 앞서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때 현재와 같이 중심관세율 구조로 유지할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후생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무세화를 비롯해서 큰 폭의 관세율 변화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관세율 변화로 얻어지는 후생증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체계의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자원배분에도 변화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심관세율 체계에서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이행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 특징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들 간의 수출입 구조와 무역수지 변화 등에 대해 논의

하고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산업별 수출입 구조 변화와 함께 산업별 세부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비중 변화 추세를 분석하여 향후 발효될 FTA가 이들 국가의 산업별 수입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교역구조는 크게 변화했다. 주요 교역 품목이 변화하였고, 국가별로는 중국과의 교역 증가가 두드러졌고 이에 따른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 감소,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확대 등의 특징이 보인다. 반면 EU와의 교역비중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한미 FTA의 체결은 이러한 교역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에 대한 교역비중이 증가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성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특히 노동집약적인 섬유류와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에서도 중국의 수입비중이 증가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수입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품목의 EU로부터의 수입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품목 또는 품질 등을 이유로 EU로부터의 수입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산업들로는 기계류에서는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등이 있고, 전자전기제품에서는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전선 등이 있고, 철강제품에는 기타철강금속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정밀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중국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미국의 수입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를 통해 이들 품목의 수입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FTA로 인해 저비용 국가에서보다 고비

용 국가로 바뀌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외관세를 낮춰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동일하게 지난 10여 년간 대EU 수입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미국과 달리 무역전환효과보다는 무역창출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예를 들어 기계류에서는 미국과 달리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비중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전자전 기제품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강제품과 화학공업제품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기타기계류의 수입비중은 63.5%에서 23.5%로 크게 감소하였다. 기타기계류의 수입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EU는 30.2%, 미국은 18.4%, 중국은 6.3%로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더 감소할 여지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나머지 기계류에서도 대EU 수입비중이 미국과 달리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보다 빠르게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적자 규모 감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적 분석과 함께 관세율 구조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10%, 20%, 그리고 40% 인하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였고, 덧붙여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해 나타내는 무역전환효과를 감안하여 전체적으로는 관세율을 10%, 20%, 그리고 40% 인하하되 산업별로 무역전환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차별적 관세감축을 실시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우선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계산업에서의 무역전환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화학, 가공식품, 그리고 곡물 산업에서 상당한 양의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앞서 산업별 교역구조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기계류에 대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미 FTA 및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에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후생은 0.27% 증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31%, EU로부터의 수입은 0.0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0.27%,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별 분석에서 예측한 대로 결과가 도출되었다¹⁾.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세율을 10%, 20%, 그리고 40% 인하하였을 경우 관세인하 폭이 클수록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후생 증가는 당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러나 관세 감축 폭이 크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후생의 변화는 관세를 10%에서 20%로 감축할 경우 약 0.32%~0.35%에서 약 0.37%~0.41%로, 또한 관세를 40%로 감축할 경우 약 0.46%~0.55%로 변화하여 큰 관세 감축 폭에 비해 후생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또한 무역전환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별로 관세를 10% 감축한 [시나리오 A-I]의 후생 증가와 관세를 20% 감축한 [시나리오 B]의 후생 증가가 각각 0.35%와 0.37%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FTA에 따른 관세율 조정은 관세율 수준의 인하도 중요하지만 무역전환효과 등 FTA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둘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 효과는 정태효과에 의한 결과이며 생산성 증대효과와 함께 동태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훨씬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태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가정하지 않았고 현실적인 정책적 제약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율을 낮출수록 우리나라 후생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일괄적인 관세 감축보다는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하여 산업별 관세 감축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지만, 이럴 경우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이루어지고 특히, 관세율을 40% 감축하였을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0.15% 증가하는 것에 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10% 증가하고 FTA를 체결한 EU로부터의 수입은 -0.01%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를 체결한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보다 오히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EU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의 수출이 FTA 이전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큰 폭의 관세율 인하는 미국과 EU로부터의 불만을 제기시킬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서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미 FTA 및 한EU FTA 이후 관세율을 40%처럼 크게 낮추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³⁾. 한편, 일괄적인 관세 감축과 비교해서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한 산업별 관세 감축 시나리오에서의 후생 수준 변화는 약 0.03~0.04%p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생 수준 변화폭이 크지 않아 중심관세율과 차등관세율 논쟁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급격한 관세율 변화보다는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면서 중심관세율 구조의 장점을 활용하여 FTA 체결에 따른 개별 산업별 무역전환효과를 감안한 일부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및 한EU FTA가 발효되었다는 가정 아래 CGE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

3) 20% 관세 감축과 함께 산업별 관세율을 조정한 [시나리오 B-I]에서도 일본과 EU로부터의 수입이 FTA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FTA 체결의 의미가 약해지는 측면이 있다.

어서 산출된 수치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결과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 이후의 관세율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목적을 삼고 있기 때문에 정태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쟁의 강화, 기술개발에 대한 자극 및 투자에 대한 자극, 그리고 시장의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 등 동태적인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동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한 관세 효과만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분석임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이런 이유로 한미 FTA 및 한EU FTA가 발효되었을 경우의 최적 관세율 수준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CGE 모형 분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다양한 FTA 효과를 동태적으로 감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적 관세율을 제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FTA는 관세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정책이지만, FTA시대에도 관세율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다수의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FTA 체결국이더라도 해당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의 관세율은 향후 WTO 관세인하협상에서 협상의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됨을 항상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FTA 정책과 함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관세율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 론	21
II. 기본관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	25
1. 현행 기본관세율 구조 특징	25
가. 기본관세율 구조	25
나. 기본관세율 구성	29
2. FTA와 기존 관세율 구조와의 관계	31
가.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31
나. 이론적 논의	33
다. 주요국의 FTA 이후 관세율 변화	35
3. 차등관세율과 균등관세율 구조 비교	38
가. 제약조건과 분석 시나리오	38
나. 분석 결과	42
III. 주요 국가별 품목별 교역 분석	51
1. 국가별 교역구조 변화 추이 비교	51
가. 미국과의 교역구조	52
나. EU와의 교역구조	54
다. 일본과의 교역구조	56
라. 중국과의 교역구조	58
마. 시사점	60
2. 산업별 수출입 변화 추이 비교	62

가. 미국과의 산업별 수출입	62
나. EU와의 산업별 수출입	64
다. 일본과의 산업별 수출입	67
라. 중국과의 산업별 수출입	70
마. 시사점	73
3. 주요 품목별 교역구조 변화	74
가. 산업분류별 수입비중 변화	74
나. 기계류 수입비중 변화	77
다. 전기전자제품 수입비중 변화	81
라. 화학공업제품과 철강금속제품 수입비중 변화	84
마. 시사점	88
 IV. FTA로 인한 관세구조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91
1. 기본 모형	91
2. 분석자료	94
가. 데이터	94
나. 국가 분류	94
다. 산업 분류	95
3. 시나리오의 설정	96
4. 추정 결과	98
가.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98
나. 무역전환효과	100
다.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102
라. 산업 생산의 변화	113
5. 결과 해석시 유의점	115
 V. 결 론	116

참고문헌	123
------------	-----

부록 1. 시나리오별 후생변화 요인 분석	128
------------------------------	-----

부록 2. FTA 체결 없이 관세율만을 인하한 경우	131
------------------------------------	-----

표 목 차

〈표 II-1〉 제2차 관세율 구조 개편원칙	27
〈표 II-2〉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29
〈표 II-3〉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1994년 이전)	30
〈표 II-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2
〈표 II-5〉 우리나라 6대 교역국(지역)	32
〈표 II-6〉 기존 관세율 수준 및 양허세율 제약(2007년)	41
〈표 II-7〉 시나리오별 최적관세율 체계	44
〈표 II-8〉 시나리오별 최적관세율 체계(섬유, 전자 관세율에 제약 가정)	46
〈표 II-9〉 시나리오별 국내생산 수준 변화	49
〈표 III-1〉 우리나라 주요 교역지역	52
〈표 III-2〉 미국의 주요 교역국	53
〈표 III-3〉 EU의 주요 교역국	55
〈표 III-4〉 일본의 주요 교역국	57
〈표 III-5〉 중국의 주요 교역국	58
〈표 III-6〉 우리나라의 대미국 품목별 수출 추이	63
〈표 III-7〉 우리나라의 대미국 품목별 수입 추이	64
〈표 III-8〉 우리나라의 대EU 품목별 수출 추이	66
〈표 III-9〉 우리나라의 대EU 품목별 수입 추이	67
〈표 III-10〉 우리나라의 대일본 품목별 수출 추이	68
〈표 III-11〉 우리나라의 대일본 품목별 수입 추이	69
〈표 III-12〉 우리나라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 추이	71

〈표 Ⅲ-13〉 우리나라의 대중국 품목별 수입 추이	72
------------------------------------	----

〈표 IV-1〉 국가분류	95
〈표 IV-2〉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표	96
〈표 IV-3〉 분석 시나리오	98
〈표 IV-4〉 한미 및 한EU FTA의 파급효과	99
〈표 IV-5〉 한미 및 한EU FTA의 후생 변화 요인 분석	100
〈표 IV-6〉 한미 및 한EU FTA의 무역전환효과	101
〈표 IV-7〉 관세인하 파급효과(시나리오 A: 10% 감축)	102
〈표 IV-8〉 관세인하 파급효과(시나리오 A-1)	103
〈표 IV-9〉 관세인하 파급효과(시나리오 B: 20% 감축)	105
〈표 IV-10〉 관세인하 파급효과(시나리오 B-1)	106
〈표 IV-11〉 관세인하 파급효과(시나리오 C: 40% 감축)	107
〈표 IV-12〉 관세인하 파급효과(시나리오 C-1)	108
〈표 IV-13〉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후생 변화 요인 분석	109
〈표 IV-14〉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11
〈표 IV-15〉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11
〈표 IV-16〉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12
〈표 IV-17〉 EU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12
〈표 IV-18〉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13
〈표 IV-19〉 우리나라 산업 생산의 변화	114

〈부표 1〉 후생 변화 요인 분석(시나리오 A)	128
〈부표 2〉 후생 변화 요인 분석(시나리오 A-1)	128
〈부표 3〉 후생 변화 요인 분석(시나리오 B)	129
〈부표 4〉 후생 변화 요인 분석(시나리오 B-1)	129
〈부표 5〉 후생 변화 요인 분석(시나리오 C)	130
〈부표 6〉 후생 변화 요인 분석(시나리오 C-1)	130

〈부표 7〉 관세인하 파급효과 (10% 관세 감축)	131
〈부표 8〉 후생 변화 요인 분석 (10% 관세 감축)	131
〈부표 9〉 관세인하 파급효과 (20% 관세 감축)	132
〈부표 10〉 후생 변화 요인 분석 (20% 관세 감축)	132
〈부표 11〉 관세인하 파급효과 (40% 관세 감축)	133
〈부표 12〉 후생 변화 요인 분석 (40% 관세 감축)	133

그림목차

[그림 II-1]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1998년 이후)	31
[그림 II-2] 지역무역협정 확산 추세	36
[그림 II-3]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교역 비중 ..	37
[그림 III-1]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입 비중 및 무역수지 추이 ...	54
[그림 III-2]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입 비중 및 무역수지 추이	55
[그림 III-3]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입 비중 및 무역수지 추이	57
[그림 III-4]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 및 무역수지 추이	59
[그림 III-5] 우리나라의 대미국 품목별 수출 추이	62
[그림 III-6] 우리나라의 대미국 품목별 수입 추이	64
[그림 III-7] 우리나라의 대EU 품목별 수출 추이	65
[그림 III-8] 우리나라의 대EU 품목별 수입 추이	66
[그림 III-9] 우리나라의 대일본 품목별 수출 추이	68
[그림 III-10] 우리나라의 대일본 품목별 수입 추이	69
[그림 III-11] 우리나라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 추이	70
[그림 III-12] 우리나라의 대중국 품목별 수입 추이	72
[그림 III-13] 화학공업제품	75
[그림 III-14] 철강금속제품	75
[그림 III-15] 섬유류	76
[그림 III-16] 생활용품	76
[그림 III-17] 기계류	77
[그림 III-18] 전자전기제품	77
[그림 III-19] 기초산업기계	78

[그림 Ⅲ-20] 산업기계	78
[그림 Ⅲ-21] 기계요소공구	79
[그림 Ⅲ-22] 정밀기계	80
[그림 Ⅲ-23] 수송기계	80
[그림 Ⅲ-24] 기타 기계류	81
[그림 Ⅲ-25] 산업용 전자제품	82
[그림 Ⅲ-26] 가정용 전자제품	83
[그림 Ⅲ-27] 전자부품	84
[그림 Ⅲ-28] 전선	84
[그림 Ⅲ-29] 정밀화학제품	85
[그림 Ⅲ-30] 기타화학공업제품	86
[그림 Ⅲ-31] 철강제품	86
[그림 Ⅲ-32] 비철금속제품	87
[그림 Ⅲ-33] 기타철강금속	88

I.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 중반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와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었다. 또한 현재 미국, EU와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GCC, 호주, 뉴질랜드, MERCOSUR, 페루, 터키, 그리고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논의중에 있다.

FTA는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충격이다. FTA 체결로 일부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율이 미체결국가와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율 변화를 통해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FTA 협정관세율과 일반 실행관세율과의 조화를 위한 관세율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FTA는 관세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정책이지만, FTA 시대에도 관세율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다수의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FTA 체결국이더라도 해당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경우에도 모든 수입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¹⁾. 덧붙여 기존의 관세율은 향후

1) 관세청 보도자료(2008년 10월 22일)에 의하면 한칠레 FTA 이후 2006년 칠레로부터 우리나라 수입된 37억달러 중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16.5억달러로 특혜세율 적용비율은 약 44%였으며, 2007년에는 수입실적 41.6억달러 중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18억달러로 특혜세율 적용비율은 약 43%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07년을 기준으로

WTO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에서 협상의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추진중인 FTA 정책에 대응한 적절한 관세율 구조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FTA 정책과 관련하여 우선 경제규모가 큰 미국, EU와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 중심관세율 구조의 변화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EU와 마찬가지로 거대경제권인 중국, 일본과의 한중일 FTA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미국, EU와 체결한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 수준에 불과한 한중일 FTA를 포함하는 것보다 미국, EU와의 FTA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미국, EU,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 모두 FTA 체결을 한다면 우리나라 대외관세의 의미는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발효를 앞두고 있는 미국, EU와의 FTA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한편 본 연구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FTA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 등 FTA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자원배분을 개선할 수 있는 관세율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CGE 모형분석에서도 자본축적 모형이 아닌 정태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연구 중에서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보고서는 다수가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문헌으로는 Cheong·Wang(1999)을 비롯하여 박순찬·강문성(2004), 최낙

EFTA의 FTA 특혜세율 적용비율은 약 41%, 아세안의 수입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비율은 약 8.7%라고 발표하였다.

균·이홍식 외(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07), 김기홍(2008) 등이 있다. 한EU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김기홍 외(2005), 정인교·조정란(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10) 등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 중에서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 중 정재호(2000, 2001)에서는 FTA 체결 이후 미체결국에 대한 최적의 대외관세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FTA 체결 이후 미체결국에 대한 대외관세는 낮추는 것이 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재호(2000, 2001)는 이론적 논문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 변화에 대해 연구한 기존 보고서로는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 정재호·박순찬(2006) 등이 있다.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에서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최적관세율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에서는 FTA 체결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분석하였다. 정재호·박순찬(2006)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WTO DDA협상에 대해 가상의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 산업 및 관세율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재호·박순찬(2006)에서도 FTA 체결은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FTA확대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관세율 정책 수립의 정책적 참고자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중심관세율 수준을 결정하고 주요 산업별 향후 관세율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기술한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 전반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기본골격인 관세법에 명시된 기본관세율의 변천과 기본관세율 체계를 논의한다. 또한 FTA 체결 이후 FTA 미체결국가에 대한 대외관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다른 FTA 체결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FTA 협정

세율과 기존 관세율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덧붙여, FTA를 포함하여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가 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율을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로 유지할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재 FTA 발효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FTA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 특징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들 간의 수출입 구조와 무역수지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산업별 수출입 구조 변화와 함께 산업별 세부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비중 변화 추세를 분석하여 향후 발효될 FTA가 이들 국가의 산업별 수입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관세율 구조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개별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앞선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기본관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 전반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기본골격인 관세법에 명시된 기본관세율의 변천과 현행 기본관세율 구조의 특징 등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FTA 체결과 기존 관세율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FTA 체결과 기존 관세율과의 이론적 관계에 대해 개관한 후 주요 국가들의 FTA 추진 이후 관세율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FTA 등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가 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를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로 유지할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즉, 제3절에서의 분석은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구조의 변화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변화가 필요할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현재 FTA 이외에도 WTO에서 DDA협상이 진행중에 있는 등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보다 기본적인 관세율 구조 변화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다.

1. 현행 기본관세율 구조 특징

가. 기본관세율 구조²⁾

우리나라의 관세율 체계는 1983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2) 본절의 내용은 정재호(2008)의 내용을 인용·요약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재호(2008) 참고.

1983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기본적으로 차등관세율 체계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하였다. 차등관세율 체계는 균등관세율 체계에 대비된 개념으로 개별 품목별로 차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율 체계를 의미한다. 1980년대 이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품목별로 다양한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산업 지원적인 차등관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최적의 관세율 정책이었다. 또한 이 당시에는 관세를 통한 재정 확보가 관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였기 때문에 품목별로 다양한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관세율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수입대체사업육성을 위한 완제품에 대한 높은 보호관세정책과 중화학공업 등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원료 및 중간재에 대한 낮은 관세율 정책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즉, 원료, 중간재, 완제품 사이의 과도한 관세율 격차를 발생시켜 원료 및 중간재의 국산화 의욕을 낮추었고, 이러한 차등관세율 정책으로 인해 원료 및 중간재를 수입하여 단순 조립·가공하는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이후 국가 주도적인 계획경제개발 정책에서 민간 주도적인 경제체제가 강조되면서 관세를 통한 산업 지원적 정책보다는 관세의 산업 중립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1984년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되었다.

균등관세율 체계는 관세의 산업 중립적 기능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유도하여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산업으로의 자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산업 차별적인 관세율 정책을 일시에 단일 세율인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중심관세율을 설정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중심관세율이 적용되도록 관세율을 개편하였다. 한편, 관세율이 크게 인하됨에 따

II. 기본관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 27

라 관세율인하예시제를 시행하였다. 관세율인하예시제는 향후의 관세율 인하 일정을 사전에 공포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자원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기본구조가 된 중심관세율 체계는 1984년에 시작하여 2차례에 걸쳐 실시된 관세율인하예시제에 의해 형성되었다. 제1차 관세율인하예시제는 1984년에 시작하여 1988년에 종료되었다. 제1차 관세율인하예시제에서는 기본적으로 20% 균등관세율을 중간재 및 소비재에 적용하고 기초원료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제2차 관세율인하예시제는 1989년부터 시행되어 1994년에 종료되었다. 1988년 당시 20%인 중심관세율을 1989년 15%, 1990년 13% 등 점차 중심세율을 인하하여 제2차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종료되는 1994년에는 8%의 중심세율 적용을 목표로 실행하였다. 원료, 중간재, 완제품을 구분하여 관세율에 차이를 두고 다시 국산재와 수입재 간의 경쟁 여부와 국산재의 경쟁력 정도에 따라 관세율의 수준 혹은 인하 속도를 조절하였다.

〈표 II-1〉 제2차 관세율 구조 개편원칙

(단위: %)

		1988	1989	1990/91 ¹⁾	1992	1993	1994
원료	비경쟁원료 경쟁원료	5 10	1~2 5	1~2 5	1~2 5	1~2 4	1~2 3
중간재 및 완제품	중심세율(일반 공산품) 경쟁력 확립 및 국산화 곤란 품목	20 10~20	15 10	13 10	11 10	9 9	8 8
	(1차 가공품) 사치성 소비재	(10~20) 30~50	(10) 20	(10) 16	(9) 13	(7) 10	(5) 8

주: 1) 제2차 관세율인하예시제는 199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1990년도 방위세 폐지에 따라 인하예시제를 1년씩 순연하여 1994년에 종료됨.

자료: 정재호(2003).

2차례에 걸친 관세예시제 이후 1997년, 2000년 그리고 2006년에 관세율 개편이 이루어졌다. 1997년 관세율 개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일부 원자재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원자재 및 중간재의 경우 8% 적용품목은 5%로, 5% 적용품목은 3%로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둘째, 섬유·신발 등의 관세율을 부분적으로 인상하였다. 섬유류 등은 경쟁국 관세율과 양허세율에 따라 10%, 13%, 16%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섬유·의복과 신발 등 75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1990년대 이후 관세율을 인상한 경우는 1997년 관세율 정책 개편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관세율 개편은 일부 농산물과 중간재 품목에 대해 실시하였다. 우선, 일부 농산물에 대해 종가·종량 선택세를 적용하였다. 특히, 중국 등으로부터 저가로 대량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을 조절하기 위해 당근과 버섯, 파, 고사리, 들깨 등 7개 채소 가공품에 대하여 종가·종량 선택세를 적용하였다. 또한 ITA 협정을 반영하기 위해 중간재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였다. 예를 들어, 폴리실리콘, 흑연도가니 등의 관세율을 8%에서 3~5%로 인하하는 등의 중간재 관세율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6년 관세율 개편은 WCO 제4차 HS협약 개정안(HS 2007)을 적용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기초원자재의 무세화를 실시하였다. 다만, DDA 협상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관세율 개편보다는 그동안 기본관세율 체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초원자재의 경우 308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또한 세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재 등 114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탄력관세가 적용된 품목 및 잠정관세 품목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기본관세율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관세율 정책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공산품의 기본관세율 구조는 중심세율이 점차 낮아져 8%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원료

II. 기본관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 29

의 경우에도 경쟁원료와 비경쟁원료의 구분 없이 0~3%의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게 되었다. 중간제도 중심관세율 수준보다 낮은 5~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 II-2〉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단위: %)

가 공 도 별		1983	1984	1988	1989	1994	2000	2007
중심세율		20	20	20	15	8	8	8
원료	비경쟁원료	5~30	5~10	5	1~2	1~2	1~2	0~3
	경쟁원료		10	10	5	3	3~4	
중간제	경쟁력확립 (1차가공품)	20~50	20~30	10~20	10	8(5)	5~8	5~8
완제품	일반 공산품	40~80	40~50	20~30	15	8	8	8
	경쟁력 취약						10~16	10~16

자료: 정재호(2008).

나. 기본관세율 구성³⁾

관세인하예시제가 실시되면서 중심세율을 중심으로 관세율이 분포하게 되었다. 제1차 관세인하예시제에서 제시한 20% 중심세율에 의해 1984년 41.9%의 품목에 기본관세율 20%가 적용되었고, 1988년에는 그 비중이 증가하여 61.8%의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 20%가 적용되었다. 제2차 관세인하예시제를 거치면서부터 1994년 이후 중심관세율이 8%로 낮아졌다. 1994년 당시 8% 중심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은 60%였다.

3) 본절의 내용은 정재호(2008)의 내용을 인용·요약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재호(2008) 참고.

〈표 II-3〉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1994년 이전)

(단위: %)

1983	세율별	0	5	10	15	20	25	30	40	50	100	총량		
	구성비	6.8	3.5	10.8	11.2	29.6	3.3	1.4	8.7	10.6	0.39	0.5		
1984	세율별	0	5	10	15	20	25	30	40	50	80	90	100	총량
	구성비	3.7	5.9	14.6	5.1	41.9	0.3	4.5	13.2	2.4	0.1	0.5	0.4	0.4
1988	세율별	0	5	10	15	20	30			50	100	총량		
	구성비	3.6	5.6	16.6	3.9	61.8	4.7			3.0	0.4	0.5		
1994	세율별	0	1~3	5	8	10	20	30	40	50	총량			
	구성비	5.5	15.6	11.5	60.0	0.3	1.4	2.8	0.9	1.4	0.7			

자료: 박상태(2002).

관세인하예시제가 종료된 이후 1998년 8%의 중심세율이 기본관세율로 적용된 품목의 비중은 63.3%이고, 2000년에는 그 비중이 68.6%, 2007년에는 그 비중이 67%였다. 이처럼 8% 중심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비중이 변하는 이유는 매년 품목 수가 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7년에는 기본관세율 8% 적용 품목 수가 7,791개로 2004년의 7,601개보다 190개 품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전체 품목 수가 증가하여 기본관세율 8% 적용 품목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 이후 우리나라 기본관세율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의 분포상황을 현재 기본관세율 분포로 해석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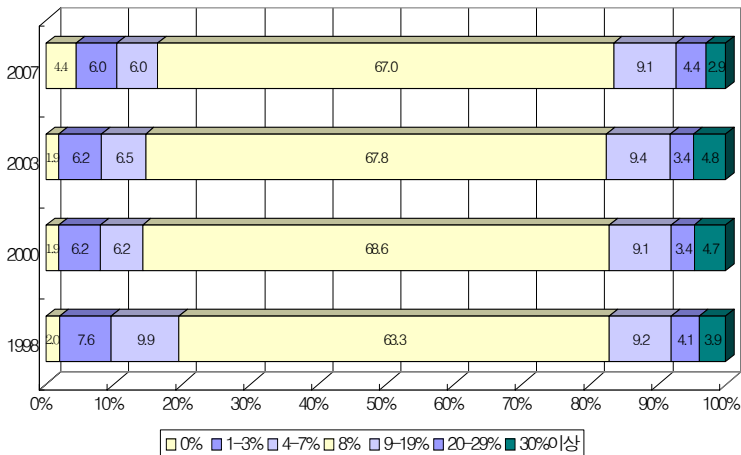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관세인하예시제를 통한 8% 중심세율이 현재까지도 우

II. 기본관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 31

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06년에 이루어진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세율 인하로 기본관세 무세(0%)가 적용되는 품목은 4.4%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30% 이상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비중은 2003년 4.8%에서 2007년 2.9%로 낮아지면서 관세율 수준이 20~29%인 품목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II-1]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1998년 이후)

(단위: %)



주 : 기본관세율이 2007년 이후 거의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기본관세율 구성비는 2007년 구성비와 거의 유사하다.

자료 : 정재호(2008).

2. FTA와 기존 관세율 구조와의 관계

가.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발효가 이루어진 경우는 모두 5개이다. 현재 미국과 EU와의 FTA는 체결되어 있고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를 앞두고 있다. 또한 협상중인 FTA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을 비롯하여 총 8개이며, 협상준비중 또는 공동연구가 진행중인 FTA는 모두 7개이다.

〈표 II-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단위: 개)

	개수	국가(지역)
발효된 FTA	5	칠레(2004), 싱가포르(2006), EFTA(2006), ASEAN(상품 2007, 서비스 및 투자 2009), 인도 CEPA(2010)
서명 및 협상타결된 FTA	2	미국(2007 서명), EU(2010 서명),
협상중인 FTA	8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터키
기타 준비중인 FTA	7	일본, 중국, MERCOSUR, 러시아, 이스라엘, SACU(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지역)로는 아세안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1.3%, 수입의 약 1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추후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교역 비중은 아세안을 포함하여 약 34.5%를 차지하게 된다.

〈표 II-5〉 우리나라 6대 교역국(지역)

(단위: %, 십억달러)

	중국	GCC	일본	아세안	EU	미국
수입비중	16.8 (1)	15.4 (2)	15.3 (3)	10.5 (4)	10.0 (5)	9.0 (6)
수출비중	23.9 (1)	3.2 (6)	6.0 (5)	11.3 (3)	12.8 (2)	10.4 (4)

주: 2009년 수출입통계 기준이며, () 안은 순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현재 우리나라와 FTA 협상중인 GCC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다. GCC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수입이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향후 중국, 일본 등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80% 정도가 FTA 체결국가로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 이론적 논의

FTA는 협정 체결국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대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그 만큼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바꿔 말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대국에 그 만큼 수출을 할 기회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생산자 입장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 상대국에 수출을 더 하게 되는 생산자에게는 FTA로 이익이 증가하지만, 반면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가격까지 하락하게 될 경우 이 분야 생산자에게는 손실이 돌아가게 된다⁴⁾. 따라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렇게 이득과 손실을 보는 집단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 그 집단 내에 있던 자원들도 다시 재배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FTA 체결로 인해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된다.

FTA 체결 이후 회원국의 대외관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Richardson(1993, 1995), Bagwell and Staiger(1997), 정재호(2000, 2001), Bond, Riezman and Syropoulos(2004) 등이 있다.

4) 국내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비자의 잉여는 증가하게 되어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또한 정부에는 그만큼의 관세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생산자들의 득실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았다.

Richardson(1993)은 소국(small country)과 대국(large country)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였을 때 '대국은 기존의 관세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가정 아래서 소국의 최적관세에 대하여 논하였다. Richardson (1993)은 소국이 관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후 대외관세를 낮추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Richardson(1995)은 두 대국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한 후의 최적관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두 대칭적인 대국의 유일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은 두 나라가 영(0)의 대외관세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두 대국의 대외관세가 같은 수준일 때 그 중 한 국가가 관세를 상대국보다 아주 조금 낮게 낮출 경우, 자국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더 값이 비싸진 상대국에 수출을 하게 되고 그 수출물량만큼 자국에서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므로 관세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대외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국가는 상대 회원국의 수출로 인하여 그만큼의 관세수입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관세수입 차이로 두 나라의 후생함수가 두 나라의 대외관세가 동일한 점에서 비연속적 함수 관계를 나타내므로 두 대칭적인 대국의 유일한 내쉬(Nash)균형은 두 국가가 영(0)의 관세를 채택하는 것이다.

Bagwell and Staiger(1997)는 Richardson과 유사하지만 관세수입 경쟁이 아닌 수출자에 주목하면서 3국 모델을 통해 2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 tariff complementarity effect로 인해 대외관세를 낮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대외관세를 낮추는 tariff complementarity effect는 관세동맹(CU)보다는 FTA에서 보다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Bond, Riezman and Syropoulos(2004)는 관세동맹(CU)으로 회원국 간 관세가 없어지더라도 비회원국들의 후생수준에 변화를 주지 않는 대외관세 조합이 존재한다는 Kemp-Wan tariff adjustment를 이용하여 FTA 이후에 회원국들은 대외관세를 낮추 것이 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재호(2000)는 소국과 대국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할 경우의 최적

관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재호(2001)는 소국과 소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를 상정하여 최적관세 및 가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FTA로 인해 상대국에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외관세를 낮추게 되고 소국인 경우에는 무세까지 낮추게 된다. 또한 FTA로 인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수출증가로 인해 그 만큼의 관세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그 혜택은 결국 상대국 생산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국의 무임승차를 줄이는 것이 자국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적의 정책이 된다.

결론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이론적으로 FTA 체결 이후 FTA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관세(external tariff)는 낮추는 것이 최적의 관세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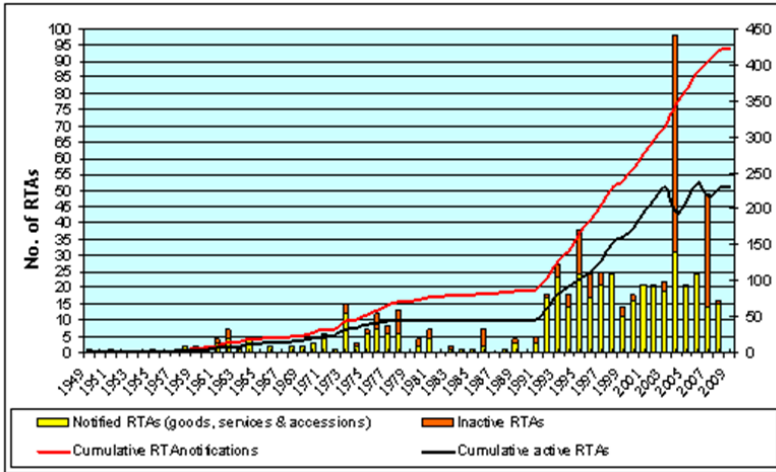
다. 주요국의 FTA 이후 관세율 변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GATT 체제에서의 지역무역협정 건수는 123건이었다. 그러나 2010년 초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건수는 462건으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339건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WTO에 의하면, 현재 검토중이거나 협상중인 또는 협상 발효예정인 지역무역협정은 약 400건이고 이 중 약 90%가 FTA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주요 국가들 중 FTA 추진 이후 자국의 관세율을 조정한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칠레는 FTA 체결에 적극적이고 지역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교역비중도 8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에 관세율을 1%p 인하하였다. 칠레는 2002년까지 자국의 관세율을 7% 균등관세를 체계로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 6% 균등관세를 체계로 인하하였다. 즉, 균등관세율 정

책은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관세율 수준만 인하하였다⁵⁾.

[그림 II-2] 지역무역협정 확산 추세



자료: WTO.

미국,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 중 전체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국가들이 FTA 이후 자국의 관세율 수준을 조정하지 않은 이유로는 첫째, FTA 체결국들과의 교역규모가 자국의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경우 NAFT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NAFTA 체결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진행으로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효과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 밖에 미국이 체결한 FTA들은 미국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도 유사하다. 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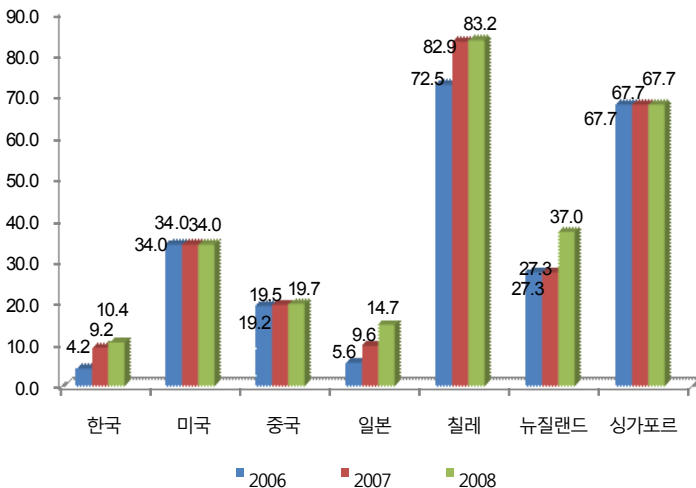
5) 칠레는 균등(단일)관세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금류 품목(HS 0207)에 대해서는 단일관세율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다.

가포르는 대부분 무세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DDA 협상이 진행중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를 인하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인하를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DDA 협상이 오랫동안 타결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DDA 협상이 현재 지지부진하기는 하지만 어느 국가나 WTO 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DDA 협상을 통해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DDA 협상의 지지부진함을 FTA 추진을 통해 충족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직 자국의 교역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과의 FTA가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DDA 협상 이후 관세율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세를 인하하기보다는 DDA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I-3]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교역 비중

(단위 : %)



자료: 한국무역협회(2009).

3. 차등관세율과 균등관세율 구조 비교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1980년 중반 이후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을 낮추면서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DDA 협상과 함께 FTA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를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절에서의 분석은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구조의 변화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세율 구조 변화가 필요할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를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FTA 이외에 WTO DDA 협상 등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보다 기본적인 관세율 구조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가. 제약조건과 분석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model)을 이용하여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하였을 경우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와 비교하여 후생 변화 등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관세율 구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개별 산업들의 생산에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실시한 선행 연구로는 정재호(2008)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반균형모형(CGЕ) 모형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CGE 모형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정재호(2008)와 동일하

다. 그러나 정재호(2008)에서는 2003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지만, 본고에서는 2007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7년 산업연관표 자료는 현재까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신의 산업연관표 자료이다.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관세율⁶⁾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제약하의 최적화 문제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주어진 정책적 제약조건 아래서 대표적 소비자의 후생함수를 최대화시키는 최적관세율을 도출하고자 한다.

$$\begin{array}{ll} \text{Max} & \text{사회적 후생} \\ \text{s.t.} & 1) \text{ 일반균형조건} \\ & 2) \text{ 정책적 제약조건} \end{array}$$

본 연구에서 사회적 후생은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함수이며, 정책적 제약조건으로는 경제적 혹은 정치적 여건을 감안한 조건들로 우선 정부의 실질세수는 변화하지 않고 관세수입도 정부 세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고 가정하였다. 관세율 변화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생산 요소와 재화들 간의 상대가격체계가 바뀌어 자원재분배가 발생하여 정부의 실질수입도 변화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세수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제자료(2007년)를 이용하여 최적관세율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정부의 공공재 공급 등 개별적 지출행위가 관세율 변화에 의한 상대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 수준은 유지되게 함으로써 정부의 그 당시 지출행동을 보장해 주도록 설정하는 것이다⁷⁾. 또한, 정부의 실질세수가 유지된다는 제약

6) 본 연구에서의 최적관세율이란 경제적·정치적 여건 혹은 정부의 예산 제약 등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제약조건 아래서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7) 본 연구에서 정부의 효용함수는 콥-더글러스 함수에 의해 기술된다고 가정한다. 콥-더글러스 함수는 세수규모, 가격체계에 상관없이 각 재화별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국모형을 가정하고 있는 본 모형에서 사회적 후생은 분명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최적화를 논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약조건은 비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세수입 중 관세세수가 일정부분을 담당한다고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 관세를 통한 실질세수입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가정은 우리나라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재정적 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적 제약조건들과 연관시켜 우선 2007년 정부 소비지출은 143.26조원으로 정부 소비로부터의 효용수준은 새로운 최적관세율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본 모형의 자료에서 2007년 정부수입은 241.389조원이며 이 중 관세수입은 7.490조원이기 때문에 2007년 정부의 재정수입 중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이다. 이 관세수입 비중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관세율 수준과 관련된 제약조건으로, WTO 양허세율과 농산물 및 음식료품에 대한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WTO에 제시한 양허세율 이상의 관세율을 수입재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⁸⁾ WTO 양허세율은 우리나라의 관세율 정책에 중요한 제약조건 중의 하나이다. WTO 양허세율은 HS 세번별로 설정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모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HS 세번별 양허세율을 산업별로 묶어 평균 양허세율을 계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국내 정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관세율 제약조건으로 농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 수준을 들 수 있다. 농산물 및 음식료품의 관세율은 기준연도의 실적세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명목지출액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8) WTO 비회원국과의 교역에서는 WTO 양허세율이 적용받지 않아 그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역의 거의 전부가 WTO 회원국들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허세율 이상의 관세율 부과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산업의 관세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농산물 및 음식료품에 대해서도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WTO 양허세율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몇몇 주요 품목들은 공산품과 달리 WTO 양허세율이 곧 실행세율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의 세율을 실행세율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농산물 관세율은 농민층을 비롯해서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에서 관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표 II-6〉 기존 관세율 수준 및 양허세율 제약(2007년)

(단위: %)

산 업	기존 관세율 (실적세율)	WTO 관세율 제약 (양허세율)
농 립 수 산 품	7.36	57.40
광 산 품	0.50	4.25
음 식 료 품	13.10	47.73
섬 유 및 가 죽 제 품	6.53	18.32
목 재 및 종 이 제 품	2.11	4.75
인쇄, 출판 및 복제	0.46	3.62
석 유 및 석 탄 제 품	0.48	9.40
화 학 제 품	2.97	7.64
비 금 속 광 물 제 품	5.73	12.99
제 1 차 금 속 제 품	0.78	4.46
금 속 제 품	3.20	12.68
일 반 기 계	3.26	9.69
전 기 및 전 자 기 기	1.02	6.88
정 밀 기 기	3.02	12.45
수 송 장 비	2.94	9.34
가 구 및 기 타 제 조 업	3.63	11.62

주: WTO 관세율 자료대로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의 양허관세율에는 시장 접근물량 초과 적용 세율이 포함되어 있어 양허세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관세인하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첫째, 2007년 실적세율과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하여 최적관세율을 계산하고, 둘째, 제약에 약간의 여유를 두어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제약조건을 설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정책적 제약조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혹은 이런 제약조건들 없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면 모형에서의 소비자 후생은 분명 증가하게 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제약들을 고려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 제약을 무시하고 정책을 고려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조건들을 고려하기로 한다.

나. 분석 결과

1) 최적관세율과 후생변화

분석 결과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경우 대표적 가계로 표현되는 후생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차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이란 현실적인 정책적 제약조건 아래서 우리나라의 최적관세율을 도출하여 나타나는 관세율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론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현재의 관세율 체계를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체계로 이행시킬 경우 차등관세율 체계가 최적관세율 체계가 됨을 의미한다.

최적관세율 체계로 제시된 차등관세율 체계는 현재의 관세율 구조와 차이가 있다. 우선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기존의 관세율로 고정할 경우, 관세율 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14개 산업군 중 8개 산업군에 대해 무세를 최적관세율로 제시하였다. 최적세율로 무세가 제시된 산업들로는 광산물,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화학

제품,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수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등이 있다. 반면, 석유 및 석탄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상이 제시되었다. 석유 및 석탄제품은 기존의 관세율 0.5%에서 8.2%로, 그리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1.0%에서 4.2%로 대폭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인쇄, 출판 및 복제,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산업만이 기존과 유사한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무세화를 비롯해서 큰 폭의 관세율 변화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얻어지는 가계의 후생증대는 동등변이(Equivalent Variation) 개념으로 0.0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에 의해 나타난 최적관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별로 대폭적인 관세율 체계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 얻어지는 후생증대는 미미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자원배분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심 관세율 체계에서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이행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관세율 제약 중의 하나인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에 대해 기존의 관세율 수준으로 고정하는 대신 최대 10% 감축할 수 있다는 제약을 둔 경우 최적관세율을 계산하면, 우선 가계의 후생증대는 0.048%로 예상대로 농산물 관세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약간의 후생증가가 발생한다⁹⁾. 그러나 다른 산업들의 최적관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즉, 8개 산업에 대해서는 무세화가 제시되었고, 석유 및 석탄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 대해서는 큰 폭의 관세 인상이 제시되었다.

9)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에 대해 정책적 제약을 두지 않는 경우의 최적관세율은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모두 무세가 최적관세율이고 이 경우 가계의 후생증가는 0.080%이었다.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최적관세율 체계에서 눈에 띄는 특징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관세율이 무세로 대폭 인하(6.5%→0%)되는 것과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이 대폭 인상(약 4배 이상)되는 것을 열거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무세화가 제시된 산업 중 광산품은 현실적으로도 무세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우선 광산품에 대해 이미 정부에서도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무세화를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무세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산품의 관세는 무세에 가까워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 밖에 다른 산업들의 경우 기존 실적관세율이 2~6.5%로 이들 산업의 무세화에는 무리가 있다.

〈표 11-7〉 시나리오별 최적관세율 체계

(단위: %)

산 업	기존 실적관세율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유지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최대 10%까지 인하
농 립 수 산 품	7.4	7.4	6.6
광 산 품	0.5	0.0	0.0
음 식 료 품	13.1	13.1	11.8
섬유 및 가죽제품	6.5	0.0	0.0
목재 및 종이제품	2.1	0.0	0.0
인쇄, 출판 및 복제	0.5	0.4	0.4
석유 및 석탄제품	0.5	8.2	9.0
화 학 제 품	3.0	0.0	0.0
비 금속 광물 제 품	5.7	5.8	5.5
제 1 차 금 속 제 품	0.8	0.0	0.0
금 속 제 품	3.2	0.0	0.0
일 반 기 계	3.3	3.3	3.0
전기 및 전자기기	1.0	4.2	4.5
정 밀 기 기	3.0	3.7	3.7
수 송 장 비	2.9	0.0	0.0
가구 및 기타제조업	3.6	0.0	0.0
가계의 후생증가	기준	0.043	0.048

섬유 및 가죽제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앞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중 심세율 8%에서 벗어나 13~1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실적관세율도 공산품 중에서 가장 높은 6.5%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을 무세화하는 급격한 관세 변화에는 섬유산업이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반대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WTO 양허수준까지 대 폭 인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¹⁰⁾. 즉, 섬유산업의 관세율은 없애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ITA 협정으로 이미 일부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무세화가 추진되었고, 향후 WTO DDA 협상에서도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무세화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관세율을 WTO 양허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¹¹⁾.

이 밖에 석유 및 석탄제품의 관세율도 대폭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실질적인 세수 중립제약과 관세세수의 일정 비중 유지를 가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관세율과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약을 설

10)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의 관세율이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보다 매우 낮은 상황에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이 대폭 낮아지면 CGE모형은 관세가 크게 감축되는 산업으로 자원을 집중 배정하고 오히려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의 관세율을 높일 것을 제안하게 된다. 이는 CGE모형 분석의 한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11) DDA 협상에서 무세화가 언급되는 분야로는 자동차와 그 부품, 자전거와 그 부품, 화학, 전기 및 전자제품, 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보석 및 귀금속, 기초원자재(raw materials), 스포츠용품, 섬유, 의류 및 신발 등 12개 분야가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전기 및 전자제품 분야의 무세화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하여 최적관세율을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구체적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고 전기 및 전자기기의 관세율은 기존의 실적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계산하였다.

〈표 II-8〉 시나리오별 최적관세율 체계(섬유, 전자 관세율에 제약 가정)

(단위: %)

산 업	기존 실적세율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유지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최대 10% 인하
농 립 수 산 품	7.4	7.4	6.6
광 산 품	0.5	0.0	0.0
음 식 료 품	13.1	13.1	11.8
섬 유 및 가 죽 제 품	6.5	3.3	3.3
목 재 및 종 이 제 품	2.1	0.0	0.0
인쇄, 출판 및 복제	0.5	0.7	0.8
석 유 및 석 탄 제 품	0.5	8.7	9.6
화 학 제 품	3.0	0.0	0.0
비 금 속 광 물 제 품	5.7	8.7	8.6
제 1 차 금 속 제 품	0.8	1.8	2.1
금 속 제 품	3.2	0.0	0.0
일 반 기 계	3.3	4.8	4.4
전 기 및 전 자 기 기	1.0	1.0	1.0
정 밀 기 기	3.0	5.3	5.4
수 송 장 비	2.9	0.0	0.0
가 구 및 기 타 제 조 업	3.6	0.0	0.0
가 계 의 후 생 증 가	기준	0.036	0.042

주: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고,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관세율은 현재의 관세율 수준보다 높을 수 없다는 가정을 이용하였다.

우선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기존의 관세율로 고정할 경우, 가계의 후생증대는 0.036%였고,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최대 10% 인하할 수 있다는 제약을 둔 경우에는 0.042%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제시된 최적관세율 구조는 우선 광산물, 목재 및 종이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수송장비, 그리고 가구 및 기타제조업에 대해서만 무세화가 제안되었고, 그 밖의 관세율은 모두 인상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 인하와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관세율 인상을 억제함으로 인해 6개 산업의 최적관세율은 기존 실적세율보다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추가됨으로써 최적인 차등관세율 체계를 도출한 결과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얻어지는 가계의 후생증대는 이전의 경우에 비해 더 작아진다. 현실적 제약이 추가적으로 최적관세율 구조에 더 많은 제한으로 작용함으로써 그만큼 가계의 후생증대도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후생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차등관세율 구조를 모색하게 될 경우 가계의 후생증가가 예상보다 적었다. 특히, 여기에 현실적인 제약을 추가할 경우 후생증대는 더욱 작아졌다. 따라서 관세율 체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재배분 비용을 감안하면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전환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 국내생산 변화

관세율 체계의 변화는 수입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내수재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에도 변화를 줌으로써 경제 내에서의 자원 재배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원 재배분을 통해 개별 산업별 생산, 가계의 소비 변화 등을 가져오게 된다. 이 중 관세율 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별 국내생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관세율이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전기 및 전자기기, 섬유 및 가죽제품의 국내생산 변화를 살펴보면, 이들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관세율 제약을 가정하지 않은 경우 이들 산업의 국내생산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섬유 및 가죽제품은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수입 증가로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반면 전기 및 전자기기는 관세율 증가로 자원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국내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산업에 대해 현실적인 관세율 제약을 가정하여 분석하면 이들 산업의 국내생산 변화폭이 줄어들게 된다.

전기 및 전자기기,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 제약의 유무에 따라 수송장비의 국내생산 증가폭이 달라진다. 전기 및 전자기기,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 제약이 없을 경우 수송장비의 국내생산은 약 2.5% 증가하지만, 전기 및 전자기기,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 제약이 있는 경우 수송장비의 국내생산은 약 0.4% 증가에 그쳤다. 즉, 전기 및 전자기기,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 제약이 없을 경우 이들 분야의 자원이 수송장비 분야로 배분되어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본 연구에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자원배분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관세 변화로 인해 자원이 최적의 산업으로 쉽게 재이동하여 재배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산업 간 자원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술습득 등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CGE 모형을 통한 이론적인 논의라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율 변화로 국내생산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산업은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이다.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국내생산 변화는 전기 및 전자기기,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 제약에 상관없이 모두 감소하고 감소폭도 가장 두드러진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 제약이 있는 경우 국내생산은 약 -3.4% 감소하는 반면 이들 산업의 관세율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약 -5.1%의 국내생산 감소가 발생하여 전

II. 기본관세율 구조에 대한 논의 49

기 및 전자기기,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 제약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제약이 있는 경우에 국내생산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첫째,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관세율이 무세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둘째,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만큼 가구 및 기타제조업으로 이동한 자원의 감소하기 때문에 국내생산 감소 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9〉 시나리오별 국내생산 수준 변화

(단위: %)

	전기전자기기, 섬유 무제약		전기전자기기, 섬유 제약	
	농산물, 음식료 관세 유지	농산물, 음식료 관세 10% 인하	농산물, 음식료 관세 유지	농산물, 음식료 관세 10% 인하
농 립 수 산 품	-0.014	0.055	-0.026	0.040
광 산 품	1.076	1.158	1.077	1.161
음 식 료 품	0.006	0.129	-0.000	0.119
섬유 및 가죽제품	-3.228	-3.140	-1.576	-1.457
목재 및 종이제품	-0.292	-0.273	-0.405	-0.388
인쇄, 출판 및 복제	0.122	0.136	0.205	0.259
석유 및 석탄제품	1.562	1.682	1.578	1.688
화 학 제 품	-0.353	-0.361	-0.436	-0.444
비 금속 광 물 제 품	-0.108	-0.154	0.268	0.247
제 1 차 금 속 제 품	0.373	0.380	0.285	0.348
금 속 제 품	0.306	0.310	-0.263	-0.368
일 반 기 계	0.541	0.474	0.365	0.131
전기 및 전자기기	-1.284	-1.437	0.304	0.285
정 밀 기 기	0.396	0.328	1.512	1.609
수 송 장 비	2.492	2.597	0.409	0.349
가구 및 기타제조업	-3.490	-3.414	-5.059	-5.073

〈표 II-9〉의 계속

(단위: %)

	전기전자기기, 섬유 무제약		전기전자기기, 섬유 제약	
	농산물, 음식료 관세 유지	농산물, 음식료 관세 10% 인하	농산물, 음식료 관세 유지	농산물, 음식료 관세 10% 인하
전력, 가스 및 수도	-0.026	-0.032	0.029	0.027
건 설	-0.021	-0.026	-0.038	-0.044
도 소 매	-0.022	-0.019	-0.028	-0.025
음 식 점 및 숙 박	0.034	0.116	0.009	0.093
운 수 및 보 관	-0.047	-0.061	-0.289	-0.286
통 신 및 방 송	-0.064	-0.068	0.003	0.005
금 융 및 보 험	0.024	0.030	0.005	0.01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09	-0.011	0.027	0.035
공공행정 및 국방	0.003	0.003	-0.002	-0.001
교 육 및 보 건	0.048	0.046	0.037	0.035
사회 및 기타서비스	0.120	0.118	0.103	0.102
기 타	-0.017	-0.012	-0.003	0.002

Ⅲ. 주요 국가별 품목별 교역 분석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 중에서 현재 FTA 발효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FTA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 특징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들 간의 수출입 구조와 무역수지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산업별 수출입 구조 변화와 함께 산업별 세부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비중 변화 추세를 분석하여 향후 발효될 FTA가 이들 국가의 산업별 수입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본다.

1. 국가별 교역구조 변화 추이 비교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으로는 미국, EU, 일본, 중국, ASEAN, 그리고 GCC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6개 교역국(지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6%이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0%이다.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23.9%, 전체 수입에서 16.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는 EU로 1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미국, 일본의 순서로 수출비중이 높다.

수입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지역)는 GCC로 우리나라 수입에서 15.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의 대부분이 GCC로부터 수입

되고 있다. 중국과 GCC 다음으로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일본 15.3%, 아세안 10.5%, EU 10.0%, 미국 9.0% 등의 순서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EU, 아세안 등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325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277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크다. GCC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무역수지가 382억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표 III-1〉 우리나라 주요 교역지역

(단위: %, 십억달러)

	중국	GCC	일본	아세안	EU	미국
수입비중	16.8 (1)	15.4 (2)	15.3 (3)	10.5 (4)	10.0 (5)	9.0 (6)
수출비중	23.9 (1)	3.2 (6)	6.0 (5)	11.3 (3)	12.8 (2)	10.4 (4)
무역수지	32.5	-38.2	-27.7	6.9	14.4	8.6

주: 2009년 수출입통계 기준이며, () 안은 순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가. 미국과의 교역구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약 10.4%를 차지하고 전체 수입에서는 약 9.0%를 차지하여 규모면에서 각각 전체 4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교역구조는 NAFTA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및 일본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캐나다 다음으로 가장 크다. 또한 미국이 가장 많은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도 중국이다.

Ⅲ. 주요 국가별 품목별 교역 분석 53

우리나라는 수출입 교역비중이 7번째 큰 국가로 수출 비중은 미국 전체 수출에서 약 2.7%, 수입은 미국 전체 수입에서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에 대해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2,268억달러로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 멕시코, 일본 등의 순서이고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 약 106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표 Ⅲ-2〉 미국의 주요 교역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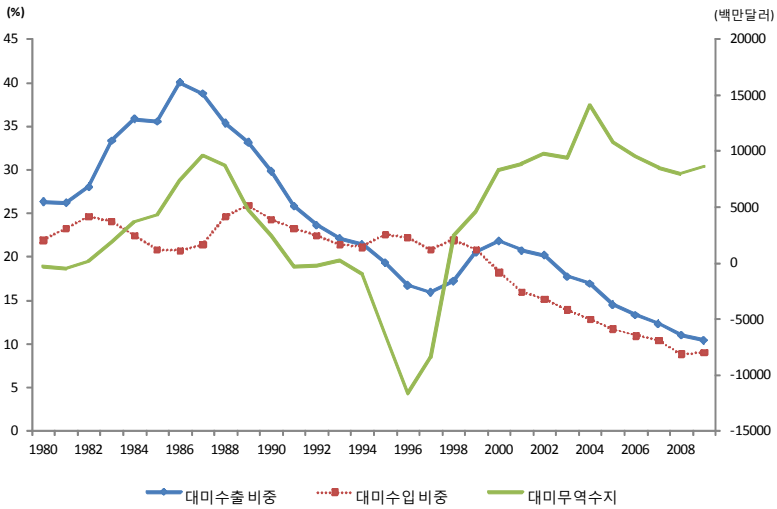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한국
수출비중	19.4 (1)	12.2 (2)	6.6 (3)	4.8 (4)	4.3 (5)	4.1 (6)	2.7 (8)
수입비중	14.4 (2)	11.3 (3)	19.0 (1)	6.2 (4)	3.0 (6)	4.6 (5)	2.5 (7)
무역수지	-202	-475	-2,268	-448	-18	-280	-106

주 : 2009년 수출입통계 기준이며, () 안은 순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역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1998년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04년에는 141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이 규모는 2004년 중국 200억 달러, 홍콩 149억달러의 무역흑자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따라서 과거 보다는 교역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그림 III-1]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입 비중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EU와의 교역구조

EU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비중의 약 12.8%, 전체 수입비중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규모면에서도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하는 주요한 교역 국가(지역)이다. 우리나라는 EU에 대해 약 14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EU의 교역구조는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이 높으며, 역내 국가를 제외할 경우 수출에서는 미국의 비중이 6.1%, 수입에서는 중국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U의 전체 수출에서 약 0.7%, 전체 수입에서 1.0%를 차지하여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은 각각 32위와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미국에 대해 약 441억유로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

Ⅲ. 주요 국가별 품목별 교역 분석 55

나라 중국에 대해서는 약 1,337억유로, 러시아 약 384억유로, 일본 약 203억유로 등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표 Ⅲ-3〉 EU의 주요 교역국

(단위: %, 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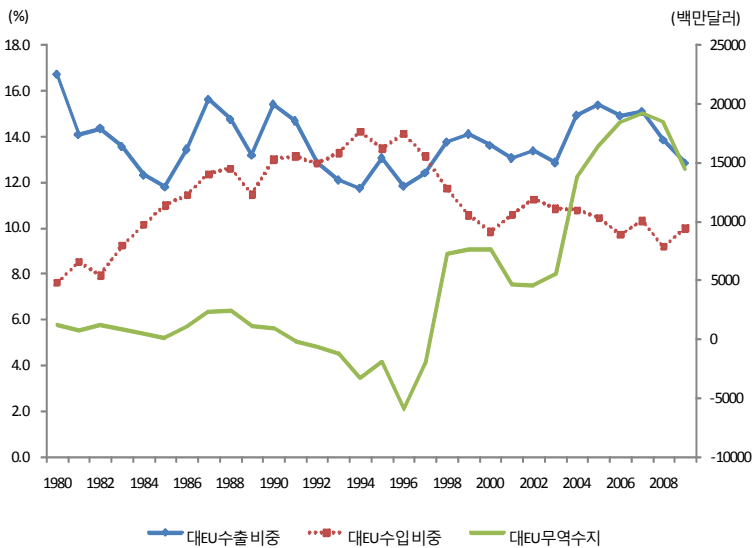
	미국	스위스	중국	러시아	터키	노르웨이	일본	한국
수출비중	6.1 (4)	2.7 (9)	2.5 (12)	2.0 (13)	1.3 (16)	1.1 (19)	1.1 (21)	0.7 (32)
수입비중	4.7 (7)	2.2 (11)	6.5 (3)	3.1 (10)	1.1 (21)	1.7 (18)	1.7 (17)	1.0 (22)
무역수지	441.2	132.6	-1,337.3	-384.1	70.7	-184.1	-203.1	-107.1

주: 1. 2009년 수출입통계기준이며, () 안은 수출입 순위임.

2. 역내국가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Ⅲ-2]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입 비중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 EU의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12~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약 14%에 육박한 이후 1990년대 말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약 1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입 비중 변화로 EU에 대한 무역수지도 1990년대 중반에는 적자였지만, 그 이후 무역수지가 개선되어 현재는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다. 일본과의 교역구조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약 6.0%, 전체 수입에서 약 15.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규모면에서도 각각 5위와 3위를 차지하는 주요한 교역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약 277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주로 수입하는 GCC 국가들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325억달러의 흑자, EU와 미국에 대해서는 각각 144억달러와 86억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어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주요 수출 및 수입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가장 높아 일본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9%이고 전체 수입에서는 중국이 22.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미국으로 미국은 일본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16.1%와 10.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전체 수출에서 8.1%를 차지하여 전체 순위에서 3위에 위치해 있으며, 수입에서는 일본 전체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여 전체 순위에서 6위에 위치해 있다.

일본은 중국, 호주 등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그 규모는 각각 11.9억엔과 22.2억엔이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약 32.4억엔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23.6억엔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표 III-4〉 일본의 주요 교역국

(단위: %, 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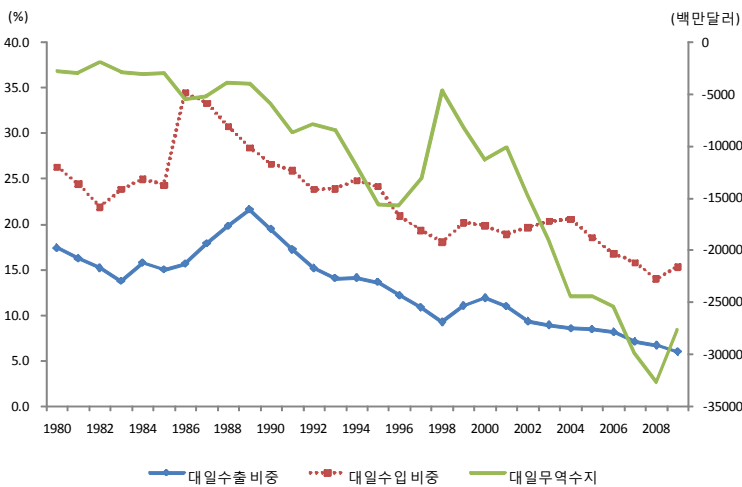
	중국	미국	한국	대만	호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수출비중	18.9 (1)	16.1 (2)	8.1 (3)	6.3 (4)	2.1 (12)	3.8 (6)	0.9 (23)	2.9 (8)
수입비중	22.3 (1)	10.7 (2)	4.0 (6)	3.3 (8)	6.3 (3)	2.9 (11)	5.3 (4)	3.0 (10)
무역수지	-11.9	32.4	23.6	16.9	-21.0	5.8	-22.2	-0.1

주: 2009년 수출입통계기준이며, () 안은 수출입 순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반적인 교역 추이의 특징은 전체 수출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19.4%(1990년)과 34.4%(1986년)였지만, 2009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6.0%와 15.3%로 감소하였다.

[그림 III-3]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입 비중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반적인 교역 추이의 또 다른 특징은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라. 중국과의 교역구조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비중의 약 16.8%, 전체 수출비중의 약 23.9%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교역 규모가 큰 주요 교역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중국과의 교역에서 약 325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며, 일본에 대해 우리나라가 약 277억달러의 적자를 보이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중국 수출의 약 18.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홍콩 13.8%, 일본 8.1%, 그리고 우리나라 4.5% 순서로 나타난다. 전체 중국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전체 수입 중 약 13.1%가 일본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편이며, 그 비중은 약 10.2%이다.

〈표 Ⅲ-5〉 중국의 주요 교역국

(단위: %, 억달러)

	미국	일본	홍콩	한국	대만	독일	호주
수출비중	18.4 (1)	8.1 (3)	13.8 (2)	4.5 (4)	1.7 (12)	4.2 (5)	1.7 (11)
수입비중	7.7 (5)	13.1 (1)	0.8 (23)	10.2 (2)	8.6 (4)	5.6 (6)	3.9 (7)
무역수지	1,432.7	-335.4	1,578.4	-485.0	-652.4	-59.7	-1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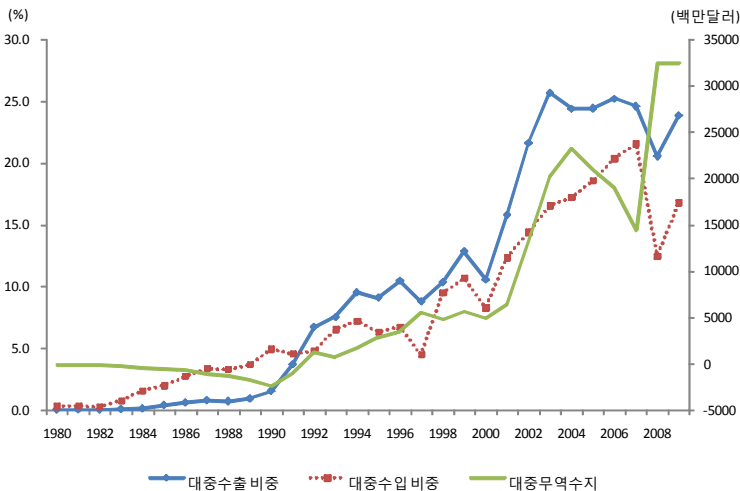
주: 2009년 수출입통계기준이며, () 안은 수출입 순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은 미국에 대해 약 1,433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는 각각 약 485억달러와 약 335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반적인 교역의 특징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25.7%)과 2007년(21.6%)에 최고 수준이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입 비중과 반대 현상으로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도 1992년을 기점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교역 규모가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근래 들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III-4]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마. 시사점

2009년 기준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 등 4개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3.1%이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1%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이들 4개국과의 교역 추이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특징은 중국과의 수출·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주요한 교역국가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23.9%, 전체 수입에서 16.8%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이전까지 중국은 우리나라 교역에서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던 국가였다. 이러한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86년 약 40%를 차지한 것을 고점으로 계속해서 그 비중이 감소하여 현재는 약 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미국에 대한 수입비중도 1989년 약 26%를 고점으로 현재는 약 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교역비중도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증가하면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1989년 약 22%를 고점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여 현재는 약 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일본에 대한 수입비중도 1986년 약 34%를 고점으로 현재는 약 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출비중 감소에 비해 수입비중 감소폭은 적었고,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 GCC와 유사한 수준의 수입비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일본과 비교하여 EU와의 교역비중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수출비중은 약 12~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비중도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

하는 추세를 보여 1994년 14%를 고점으로 현재는 약 10%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미국·일본과의 교역이 감소하는데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교역비중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에 대한 수입비중은 수출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품목군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 FTA의 체결은 이러한 교역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대한 교역비중이 현재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한미 FTA로 인해 대체될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역구조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는 무역수지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며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1990년 이전에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지만, 그 시기에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1% 미만이었기 때문에 적자규모도 매우 미미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약 32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30여 년간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고, 현재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는 약 277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EU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인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미국에 대해 약 86억달러, EU에 대해서는 약 144억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흑자를, 일본에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중국에 대해 적자를, 우리나라에 대해 흑자를 보이고 있어 한중일 3국이 서로 얽혀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해보면, 미국과 EU와의 FTA 체결은 이러한 중국과 일본에 대한 극단적인 무역수지 규모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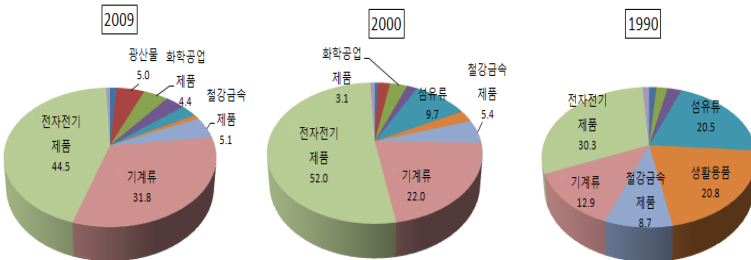
2. 산업별 수출입 변화 추이 비교

가. 미국과의 산업별 수출입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교역 품목의 변화를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의 구성비를 보면, 2009년 기준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의 비중이 약 76%를 차지하여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 수출품목임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섬유류와 생활용품의 수출이 1990년에는 20%를 약간 상회하였지만,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3%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즉, 1990년대 섬유류와 생활용품이 미국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이젠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변화를 보면,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전자전기제품은 꾸준히 수출 1위 품목이었지만, 2009년에는 2000년에 비해 그 비중이 52.0%에서 44.5%로 감소하였다.

[그림 III-5] 우리나라의 대미국 품목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III-6〉 우리나라의 대미국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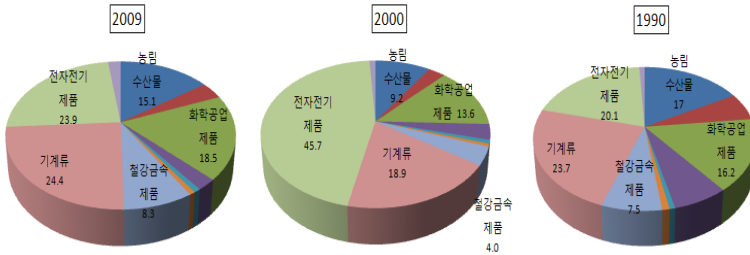
	2009	2000	1990
농림수산물	1.2	0.6	1.2
광산물	5.0	2.1	0.1
화학공업제품	4.4	3.1	2.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3.5	1.8	2.5
섬유류	2.9	9.7	20.5
생활용품	1.0	2.7	20.8
철강금속제품	5.1	5.4	8.7
기계류	31.8	22.0	12.9
전자전기제품	44.5	52.0	30.3
기타	0.7	0.8	1.2
총계	100	100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으로 각각 24.4%와 23.9%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화학공업제품과 농수산물로 각각 18.5%와 1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품목 구성은 1990년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2000년에는 전자의 비중이 45.7%로 급격히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교역은 전자전기제품과 기계류가 양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산업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I-6] 우리나라의 대미국 품목별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III-7〉 우리나라의 대미국 품목별 수입 추이

(단위: %)

	2009	2000	1990
농림수산물	15.1	9.2	17.0
광산물	3.8	2.8	6.2
화학공업제품	18.5	13.6	16.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4	3.4	6.9
석유류	0.8	0.8	0.7
생활용품	0.7	0.6	0.9
철강금속제품	8.3	4.0	7.5
기계류	24.4	18.9	23.7
전자전기제품	23.9	45.7	20.1
기타	2.1	1.0	0.9
총계	100	100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EU와의 산업별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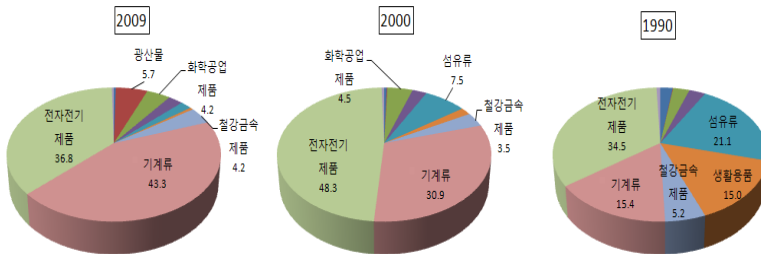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와 EU와의 교역품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EU에 주로 수출하는 수출품은

III. 주요 국가별 품목별 교역 분석 65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으로 전체 EU에 대한 수출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임을 알 수 있다. 1990년의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류와 생활용품의 수출이 각각 21.1%와 15.0%를 차지하였지만,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2%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금속제품의 수출 비중은 2009년과 1990년을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

EU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전자전기제품은 꾸준히 수출 1위 품목이었지만, 2009년에는 2000년에 비해 그 비중이 48.3%에서 36.8%로 감소하였다.

[그림 III-7] 우리나라의 대EU 품목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기계류로 전체 수입의 약 39.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화학공업제품과 전자전기제품으로 약 1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EU로부터 수입비중이 높은 기계류는 1990년에도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여 현재와 유사하였지만 2000년에는 그 비중이 28.4%로 감소되기도 하였다. 화학공업제품의 비중도 1990년 이후 약 18~19%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8〉 우리나라의 대EU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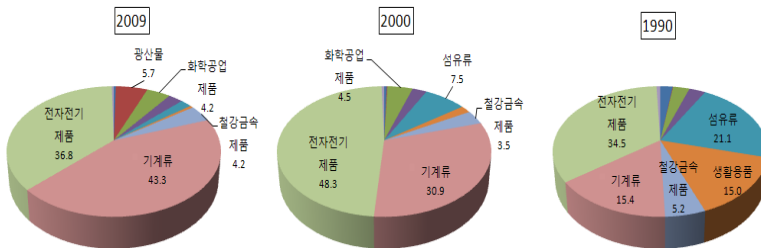
수출	2009	2000	1990
농림수산물	0.4	0.5	2.2
광산물	5.7	0.1	0.1
화학공업제품	4.2	4.5	2.9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6	2.6	2.9
섬유류	2.0	7.5	21.1
생활용품	0.6	1.8	15.0
철강금속제품	4.2	3.5	5.2
기계류	43.3	30.9	15.4
전자전기제품	36.8	48.3	34.5
기타	0.3	0.4	0.7
총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철강금속제품의 수입비중이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자전기제품의 수입비중이 2000년에는 24.5%로 1990년의 14.6%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2009년에는 18.1%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EU와의 교역은 전자전기제품과 기계류, 특히 기계류의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면서 양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으로서 양국 간 산업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I-8] 우리나라의 대EU 품목별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III-9〉 우리나라의 대EU 품목별 수입 추이

(단위: %)

수입	2009	2000	1990
농림수산물	5.2	6.1	3.8
광산물	2.7	4.9	1.5
화학공업제품	18.2	19.1	19.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7	3.4	5.9
섬유류	2.6	3.6	4.2
생활용품	2.3	2.0	1.5
철강금속제품	8.6	6.3	6.5
기계류	39.3	28.4	40.2
전자전기제품	18.1	24.5	14.6
기타	1.4	1.6	2.1
총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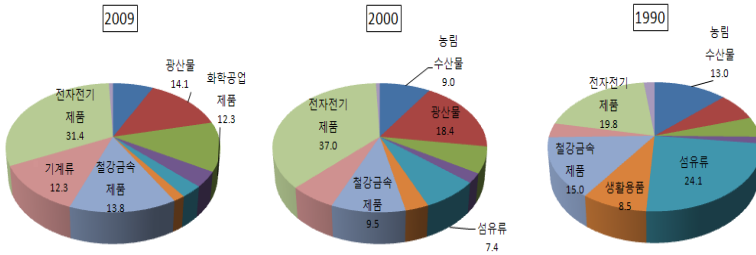
다. 일본과의 산업별 수출입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역품목의 변화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로 수출하는 수출품은 전자전기제품으로 전체 수출 중 약 31.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등의 수출비중이 약 12~14%로 고르게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EU, 중국과의 교역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물의 수출도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의 주요 수출품목 중 섬유류는 24.1%의 수출비중에서 현재는 2.9%로 플라스틱제품, 가죽제품, 생활용품 등과 함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기계류의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EU와는 차이가 있다. 광산물의 수출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

라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III-9] 우리나라의 대일본 품목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III-10> 우리나라의 대일본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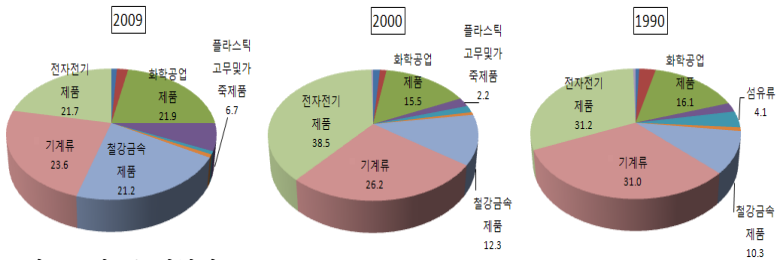
수출	2009	2000	1990
농림수산물	7.2	9.0	13.0
광산물	14.1	18.4	7.1
화학공업제품	12.3	6.5	5.1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3.8	2.4	1.7
석유류	2.9	7.4	24.1
생활용품	1.5	3.0	8.5
철강금속제품	13.8	9.5	15.0
기계류	12.3	6.1	3.6
전자전기제품	31.4	37.0	19.8
기타	0.7	0.7	1.9
총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III. 주요 국가별 품목별 교역 분석 69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으로 이들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약 8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수입 비중도 21~23% 수준으로 고르게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품목의 수입 비중은 1990년에도 높은 편인데 다만 그 때와의 차이는 전자전기제품과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약 10%포인트 낮아진 반면 철강금속제품과 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그 만큼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III-10] 우리나라의 대일본 품목별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III-11> 우리나라의 대일본 품목별 수입 추이

(단위: %)

수입	2009	2000	1990
농림수산물	1.0	1.2	0.7
광산물	2.0	1.2	3.0
화학공업제품	21.9	15.5	16.1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6.7	2.2	2.3
섬유류	0.7	1.7	4.1
생활용품	0.8	0.7	0.9
철강금속제품	21.2	12.3	10.3
기계류	23.6	26.2	31.0
전자전기제품	21.7	38.5	31.2
기타	0.4	0.3	0.5
총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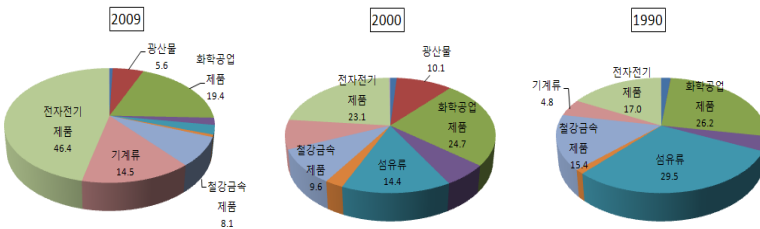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교역은 미국, EU, 중국과 달리 품목별 차이가 크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품목은 전 산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라. 중국과의 산업별 수출입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품목의 변화를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가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수출품은 전자전기제품으로 전체 수출비중의 약 46.4%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전기제품의 수출비중은 1990년대 17.0%에서 2000년 23.1%로 근래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전기제품 다음으로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는 화학공업제품과 기계류로 2009년 수출비중이 각각 19.4%와 14.5%이다. 특히, 기계류의 수출비중은 1990년 4.8%인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 중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류와 화학공업제품으로 이 중 화학공업제품은 그 비중이 1990년 26.2%에서 2009년 19.4%로 약간 감소한 반면, 섬유류는 1990년 29.5%에서 2009년 2.6%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III-11] 우리나라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III-12〉 우리나라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수출	2009	2000	1990
농림수산물	0.6	1.2	1.7
광산물	5.6	10.1	0.0
화학공업제품	19.4	24.7	26.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0	6.0	4.1
섬유류	2.6	14.4	29.5
생활용품	0.7	2.4	1.2
철강금속제품	8.1	9.6	15.4
기계류	14.5	8.2	4.8
전자전기제품	46.4	23.1	17.0
기타	0.1	0.2	0.1
총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국, EU와 비교해서 기계류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반면, 미국, EU와 달리 전자전기제품은 꾸준히 수출 1위 품목으로 그 비중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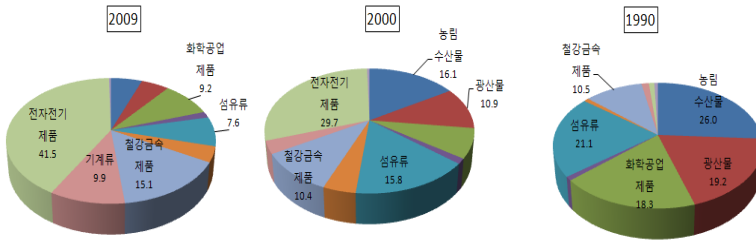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역시 전자전기제품으로 전체 수입의 약 41.5%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 전기제품의 수입비중은 1990년에 1.0%에 불과하였지만, 중국 경제의 발전과 함께 수입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기계류의 수입비중도 2009년에는 9.9%이지만, 1990년에는 전자전기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입비중이 1.3%에 불과했었다. 전자전기제품 다음으로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철강금속제품으로 그 비중이 15.1%이다.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들의 수입비중이 4~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수산물 수입비중은 1990년 26.0%에서 2000년 16.1%, 2009년 5.7%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광산물, 섬유류 등의

수입비중도 이와 유사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도 미국, EU, 일본처럼 점차 농림수산물, 광산물, 섬유류에서 전자전기제품과 기계류 쪽으로 그 수입비중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에서는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입이 양국 모두 약 40% 이상을 차지하여 양국간 전자전기제품의 산업내 교역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2] 우리나라의 대중국 품목별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III-13> 우리나라의 대중국 품목별 수입 추이

(단위: %)

수입	2009	2000	1990
농림수산물	5.7	16.1	26.0
광산물	5.1	10.9	19.2
화학공업제품	9.2	7.7	18.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6	1.3	0.9
섬유류	7.6	15.8	21.1
생활용품	4.0	4.3	0.9
철강금속제품	15.1	10.4	10.5
기계류	9.9	3.3	1.3
전자전기제품	41.5	29.7	1.0
기타	0.3	0.4	0.6
총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마. 시사점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별 주요 교역품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전자전기제품과 함께 섬유류, 생활용품 등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현재도 전자전기제품과 기계류 등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은 전체 대미 수출의 약 76%, 전체 대EU 수출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섬유류와 생활용품의 수출은 미국과 EU에서 약 2~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일본과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도 전자전기제품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에서는 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기계류보다 높았고, 일본의 경우에는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등의 수출비중이 약 12~14%로 고르게 수출되고 있었다. 이는 미국, EU, 중국과의 교역과는 다른 특징이었으며, 또한 일본에 대한 농림수산물의 수출도 여전히 약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이며, 그 다음으로 화학공업제품과 농수산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수입품목 구성은 1990년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EU에서도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을 주로 수입하며, 기계류와 화학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은 1990년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전자전기제품과 철강금속제품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에서는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입이 양국 모두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EU와의 교역에서는 기계류의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양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으로서 양국 간 산업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과의 교역은 미국, EU, 중국과 달리 품목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이 고르게 수입되고 있다.

3. 주요 품목별 교역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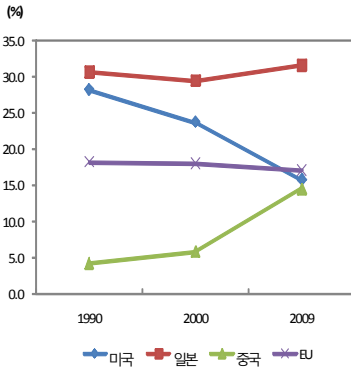
앞서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와 교역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주요 산업별로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수입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추후 우리나라가 미국, EU 등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어떤 산업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세부 산업별 분석에서는 미국, EU 등과의 FTA 발효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 산업 이외에도 농림수산물, 광산물, 섬유류, 생활용품 등이 있지만, 이들 산업은 현재도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과 EU와의 FTA 발효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수입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여전히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세부적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가. 산업분류별 수입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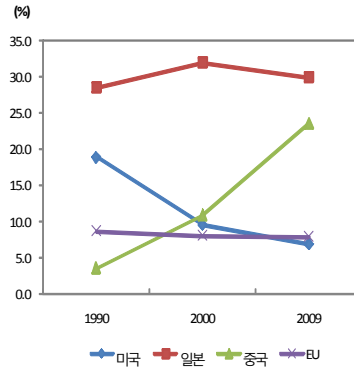
앞서 주요 국가들의 교역구조 변화에서 논의되었던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농림수산물과 광산물을 제외한 제조업 위주로 이들 산업의 국가별 우리나라 수입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난 20여 년간 화학공업제품과 철강금속제품의 수입은 일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또한 수입비중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 마찬가지로 EU로부터의 수입비중도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수입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에서의 수입비중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에서의 수입이 중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3] 화학공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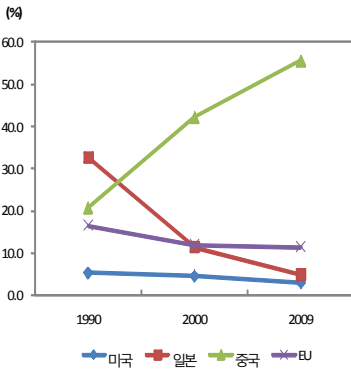
[그림 III-14]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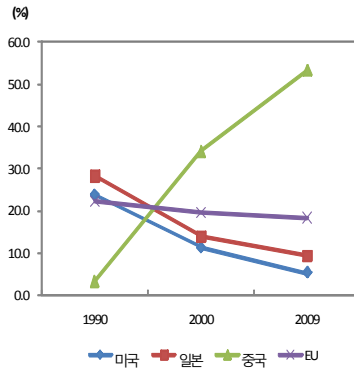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이처럼 우리나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으로는 석유류와 생활용품 산업이 두드러진다. 이들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들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 증가를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산업이다. 1990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석유류를 수입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 생활용품도 1990년에는 중국으로부터 거의 수입하지 않다가 2009년에는 석유류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이들 산업에서도 EU로부터의 수입은 큰 변화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특정 품목 또는 일정한 품질 등으로 EU로부터의 수입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 III-15] 섬유류



[그림 III-16] 생활용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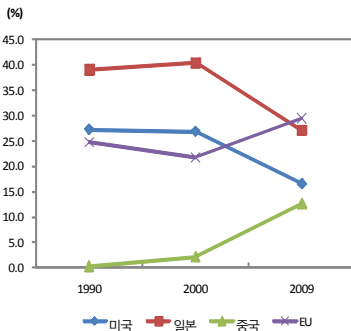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에서도 중국에서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계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계류에서는 우리나라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에서의 수입비중 감소와 함께 미국으로부터의 기계류 수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들어서는 EU로부터의 기계류 수입비중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보다 높아졌고 이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까지도 역전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근래 들어 우리나라가 기계류를 주로 EU로부터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EU로부터의 기계류 수입 증가 추세는 한EU FTA 발효 이후 기계류에 대한 관세가 무세로 전환되면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기계류 수입이 EU로 더욱 전환될 것으로 추측된다.

전자전기제품의 중국에서의 수입비중 증가는 2000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전기제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2000년부터는 미국으로부터의 전자전기제품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전자전기제품 수입 감소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전기제품 수입 증가가 1990년 이후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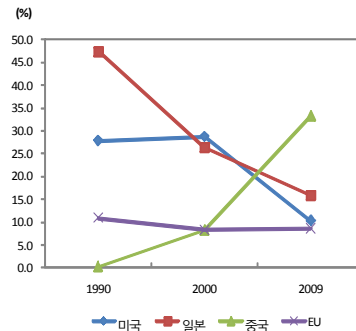
으로부터의 전자전기제품 수입을 대체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전자전기제품 수입도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전자전기제품의 수입비중에서도 EU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변화하지 않아 여러 산업에서 EU로부터의 수입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7] 기계류



[그림 III-18] 전자전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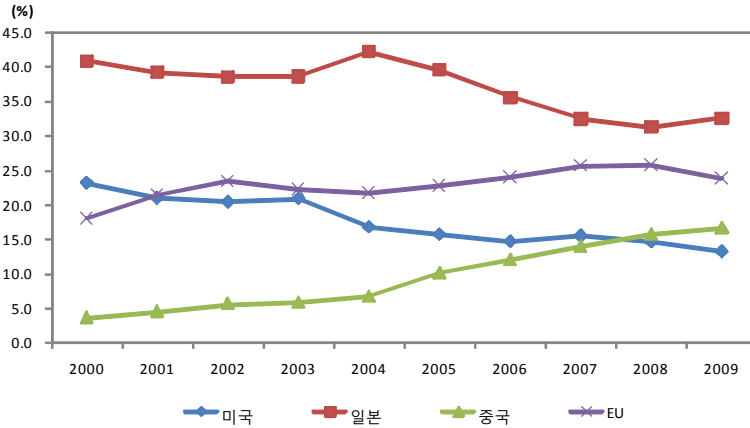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기계류 수입비중 변화

기계류 제품의 수입비중 변화 추이를 보다 세분화된 품목의 수입변동을 통해 살펴보자. 기계류의 세부 품목으로는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기계요소공구, 정밀기계, 수송기계, 기타 기계류 등이 있다. 우선 기초산업기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기초산업기계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 EU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00년 초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EU, 중국의 순서로 기초산업기계를 수입하였지만, 2009년에는 일본, EU, 중국, 미국 순서로 수입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가장 낮아졌다.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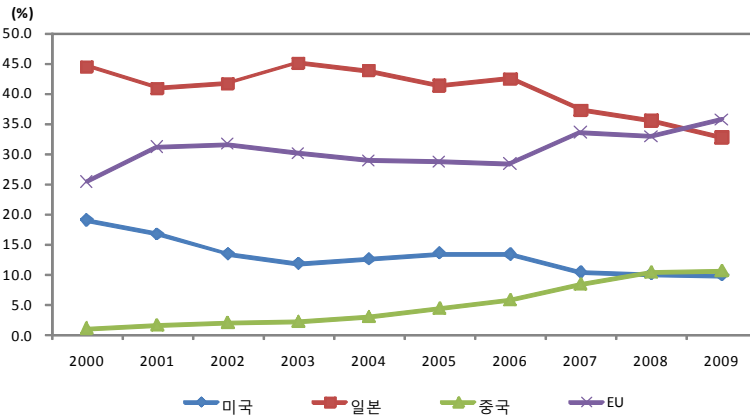
추세 속에서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EU로부터의 기초산업기계의 수입이 증가하여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9] 기초산업기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II-20] 산업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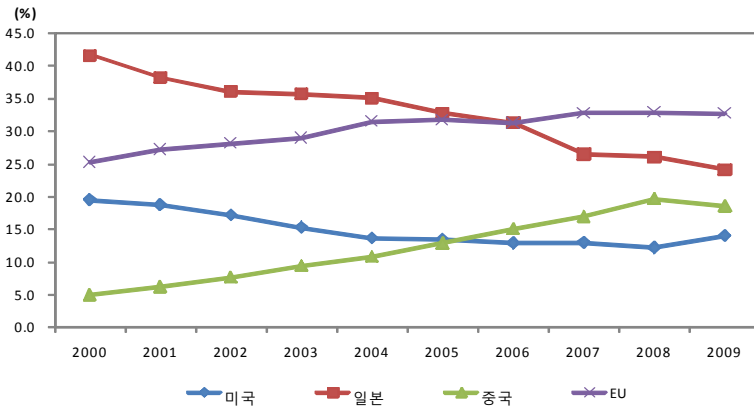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III. 주요 국가별 품목별 교역 분석 79

산업기계, 기계요소공구에서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EU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기계와 기계요소공구에서는 일본과 EU, 미국과 중국과의 수입순위가 역전되었다. 따라서 산업기계와 기계요소공구에서도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21] 기계요소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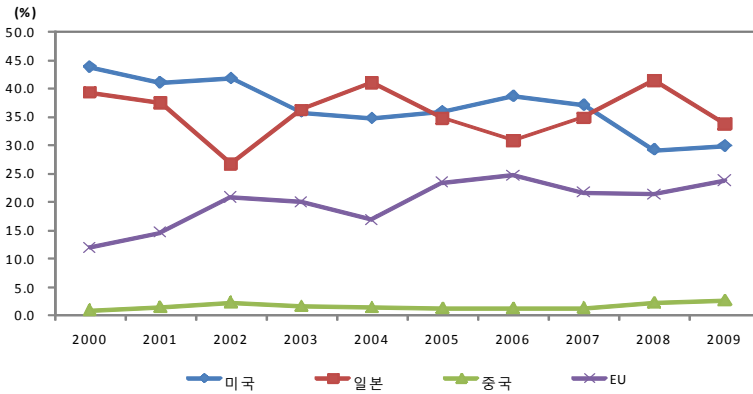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정밀기계에서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엇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EU로부터의 수입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정밀기계 수입은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밀기계에서는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만을 대체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2000년 초에는 일본과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큰 차이를 보였지만, 2009년에는 일본, 미국, EU가 거의 유사한 수입비중을 보이고 있어, FTA로 인해 그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송기계는 2000년 초부터 대EU, 대미국, 대일본 수입비중이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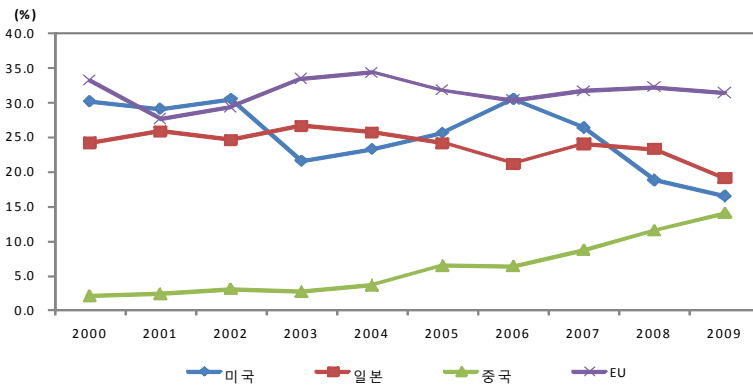
한 가운데,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은 꾸준히 30%를 약간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수입비중은 오히려 낮아지면서 약간 낮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대중국 수입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2009년에는 일본, 미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22] 정밀기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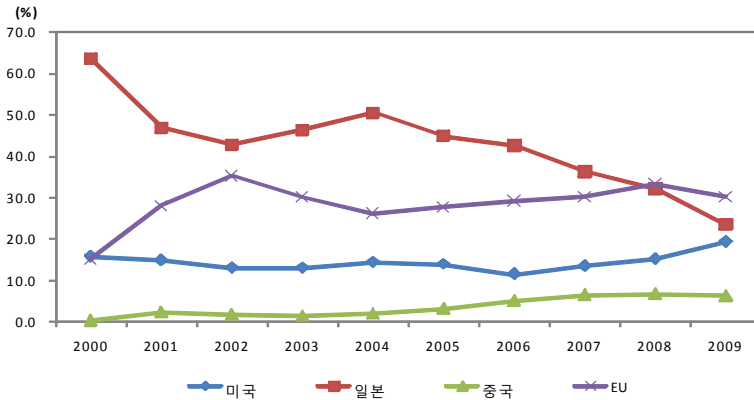
[그림 III-23] 수송기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기타 기계류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2000년 63.5%에서 2009년 23.5%로 크게 감소하였고 EU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기계류 수입에서도 대중국 수입비중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¹²⁾. 그러므로 기타 기계류 수입은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일본 수입 비중의 감소 추세를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III-24] 기타 기계류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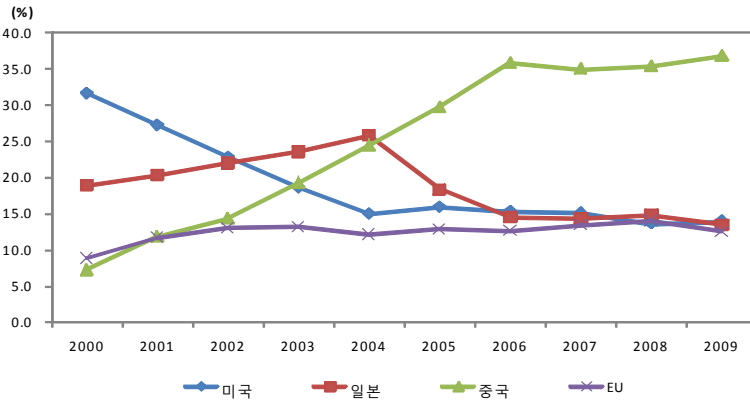
다. 전기전자제품 수입비중 변화

전기전자제품의 세부 품목으로는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전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용 전자제품에서는 대중국 수입비중이 2006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 초 산업용 전자제품은 미국에서 30% 이상 수입되었고 그 다음으로 일본 18%, 중

12) 2009년 EU로부터의 기타 기계류의 수입비중은 30.2%, 미국은 18.4%, 중국은 6.3%이다.

국과 EU는 7~8% 수준이었지만, 2009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37% 정도이고 미국, 일본, EU에서의 수입비중은 13% 수준을 보이고 있다. EU로부터 그동안 약 12~14%의 수입비중을 꾸준히 유지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미 및 한 EU FTA로 미국과 EU로부터의 산업용 전자제품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얼마만큼 대체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반제품 등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림 III-25] 산업용 전자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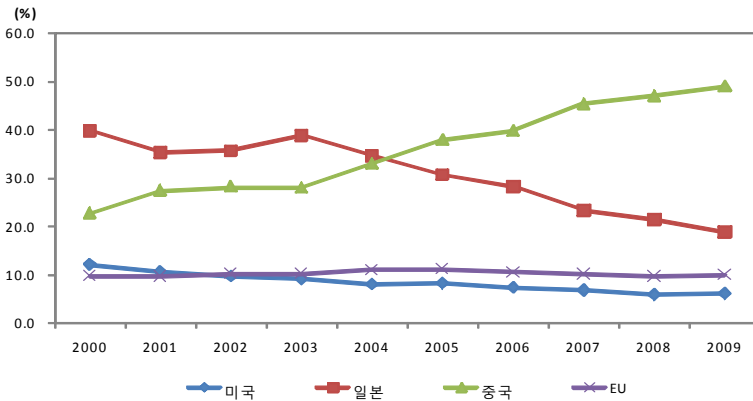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가정용 전자제품에서는 대일본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증가하였다.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비중에는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어도 현재의 가정용 전자제품 수입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부품에서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부품에서도 EU로부터는 일정 수준의 수입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등에서 EU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입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는 품질 등으로 인해 EU제품이 우리 산업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고 이들 제품이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아직 대체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 FTA로 미국으로부터의 전자부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향후에도 중국으로 인해 그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III-26] 가정용 전자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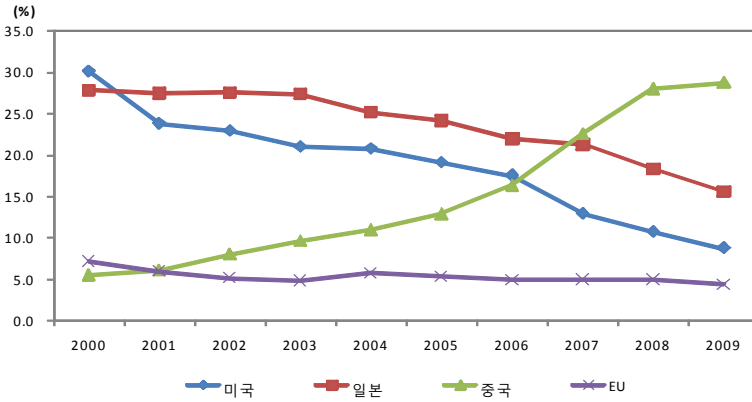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마지막으로 전선제품에서는 중국이 2006년 이후 우리나라 전선수입 시장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초 우리나라 수입 전선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일본은 이젠 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미국과 EU도 5~6%의 수입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전선제품은 이미 중국이 가격 경쟁력 등으로 우리나라 수입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또는 한EU FTA로 인해 거의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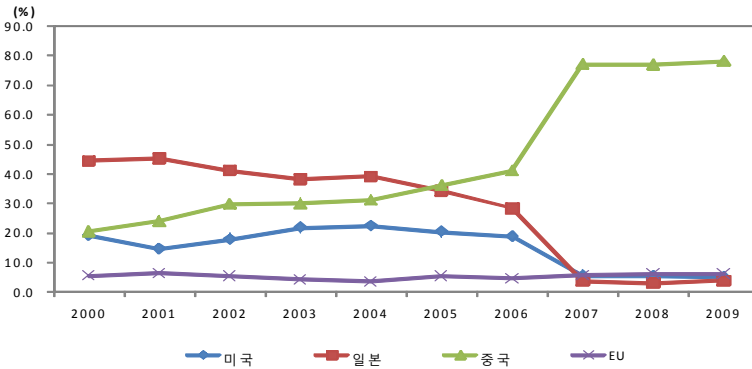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27] 전자부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II-28] 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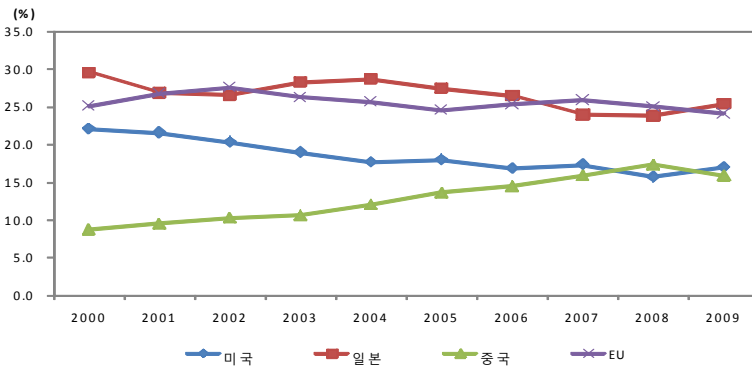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라. 화학공업제품과 철강금속제품 수입비중 변화

화학공업제품과 철강금속제품의 수입비중 변화 추이를 보다 세분화

된 품목을 통해 살펴보자. 화학공업제품에는 여러 제품이 있지만 그 중 정밀화학제품은 일본과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감소하면서 그 만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어 미국과 EU로부터의 정밀화학제품 수입이 증가한다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정밀화학제품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III-29] 정밀화학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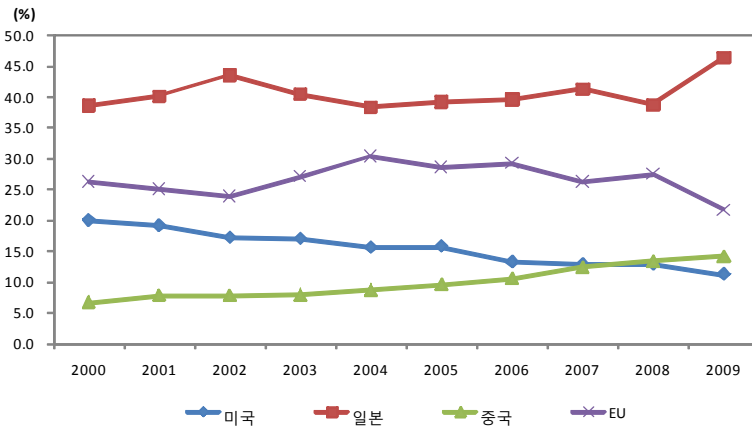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 밖에 기타화학공업제품에서는 대일본 수입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EU에서의 수입비중이 높다. 기타화학공업제품에서도 역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만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이 전환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철강금속제품 중에서는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기타철강금속 등에 대해 살펴보자. 그 중 철강제품은 2000년 초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철강제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본과 중국에서의 수입비중이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은 크지 않으며 약간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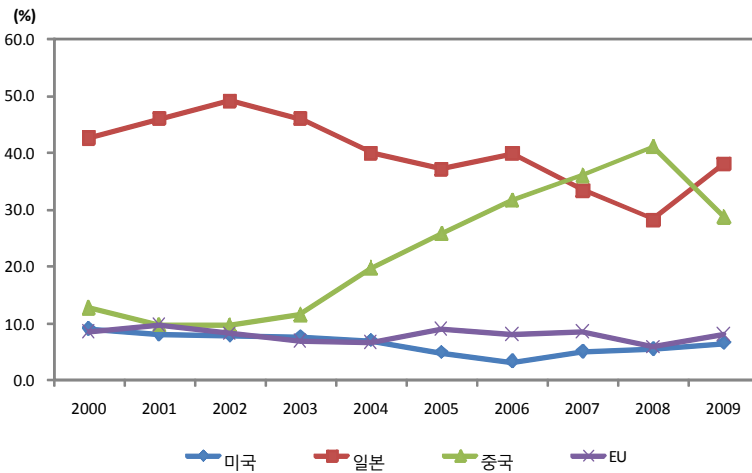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철강제품은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0] 기타화학공업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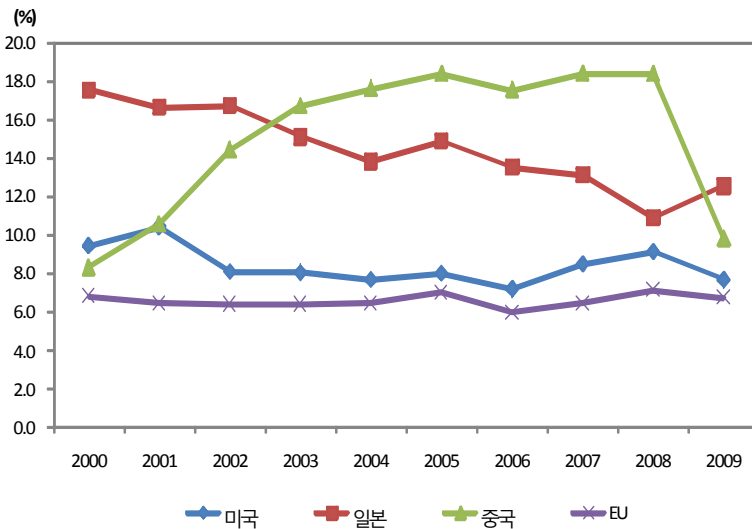
[그림 III-31] 철강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비철금속제품도 철강제품과 유사하게 2000년 초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3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약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비철금속제품도 한미 및 한 EU FTA가 발효되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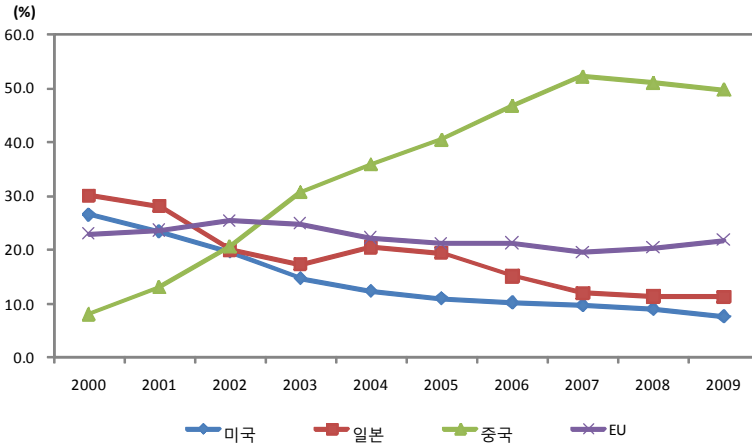
[그림 III-32] 비철금속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철강금속제품에서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기타철강 금속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 이후 중국 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미국,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철강금속에서는 한EU FTA보다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중국의 수입을 약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3] 기타철강금속



자료: 한국무역협회.

마. 시사점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특히, 노동집약적인 섬유류와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에 육박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에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증가하면서 미국과 일본에서의 수입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품목에서 EU로부터의 수입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품목 또는 품질 등을 이유로 EU로부터 수입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10%p 이상 감소된 산업들로는 기계류에서는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등이 있고, 전자전기제품에서는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전선 등이 있고, 철강제품에는 기타철강금속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정밀기계를 제

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중국에서의 수입비중이 증가하면서 대미국 수입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를 통해 이들 품목의 수입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FTA로 인해 보다 저비용 국가에서 고비용 국가로 바뀌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관세를 낮춰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일하게 지난 10여 년간 대EU 수입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기계류에서는 미국과 달리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비중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전자전기제품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강제품과 화학공업제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EU FTA가 발효된다면 미국과 달리 무역전환효과보다는 무역창출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대일본 수입비중 변화를 보면, 지난 10여 년간 10%p 이상 감소된 산업들로는 기계류에서는 산업기계, 기계요소공구, 기타기계류 등이 있고, 전자전기제품에서는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전선 등이 있고, 철강제품에는 기타철강금속 등이 있다. 가정용 전자제품, 전선 등은 20%p 이상 감소하였고, 특히 기타기계류의 수입비중은 63.5%에서 23.5%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 기타기계류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중국에서의 수입비중 증가에 기인한다. 기타기계류의 수입비중은 2009년 기준 EU 30.2%, 미국 18.4%, 중국 6.3%로 한미 FTA와 한 EU FTA가 발효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더 감소할 여지가 있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나머지 기계류에서도 대EU 수입비중이 미국과 달리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EU FTA 발효를 통해 보다 빠르게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적자 규모 감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정리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지난 10여 년간 크게 상승하였지만,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 상승 추세에 분명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FTA로 인한 이러한 특정 부분에서의 무역전환효과를 줄여줄 관세율 정책이 필요하다. 덧붙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반제품 등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위별로 교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산업별 관세율 정책의 큰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관세율은 개별 품목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입안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품목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다른 연구에서 수행될 분야로 생각된다.

IV. FTA로 인한 관세구조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을 활용하여 FTA로 인한 관세구조 변화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CGE 모형은 현실 세계를 단순화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즉 CGE 분석에 사용되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은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을 가정하는 전통적인 모형이다. 따라서 무역정책의 변화에 따른 과급효과는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으로 나타나는 정태적인 효과이다.

1. 기본 모형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CGE모형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살펴보면 CGE 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상호의존적인 국내경제 부문들과 수출 및 수입 등 대외부문을 통합한 모형이다. 이와 같이 통합된 각 부문 간의 상호연관관계 속에서 모형 내의 충격에 대한 최적해(best solution)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제정책의 선택문제에 관한 수량적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CGE 모형은 종전에는 선진국의 조세체제 및 에너지정책 변화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많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미시정책뿐만 아니라 무역정책 및 거시정책 변화가 미치는 과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¹³⁾.

최근 들어 다양한 경제적 효과분석에 있어 CGE 모형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CGE 모형은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산업연관구조하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둘째, 각 경제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CGE 모형은 대형 방정식체계를 다룰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넷째, 통상적인 연립방정식모형과는 달리 산업별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는 데 있어 비교우위가 있다. 마지막으로 CGE 모형은 수요함수와 생산함수 등의 파라미터에 대한 제약이 적은 함수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이론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CGE 모형은 부분균형분석방법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CGE 모형을 이용한 연구로 Whalley(1982), Shoven and Whalley(1984, 1986), Dixon et al.(1986), Harris(1986), Deardorff and Stern(1986)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도쿄라운드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Jones, Nguyen and Whalley(1990), Stoeckel, Pearch and Banks(1990), Goldin and Mensbrugghe(1992), World Bank(1992) 등도 다양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UR 타결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CGE 분석의 대표적인 것으로, Dervis, Melo and Robinson(1982), Chenery, Lewis, Melo and Robinson(1986) 등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 연구로는 이원영(1992)과 이홍구(1992), 최낙균(1993), 정인교(1996), Choi(1997) 등이 관세인하 및 UR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외에도 CGE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각종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등 다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GE 모형은 GTAP(Global Trade Analysis

13) Decaluwe and Martens(1988)는 1988년 현재 26개 나라의 경제분석을 위해 73개의 CGE 모형이 시도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들 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 개도국에 적용된 자세한 CGE 모형에 대해서는 de Melo(1988) 참조.

Project)의 데이터베이스와 GEMPACK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GTAP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각국의 CGE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DB로서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세계 87개 국가 및 지역의 57개 산업 부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다양한 효과분석을 할 수 있다.

기본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ertel(1997)의 제2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략히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형은 생산 및 기업부문의 경우 Leontief함수를 가정하였고 생산구조는 국내재와 수입재 등 중간재를 이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본, 노동, 토지 등 생산요소를 결합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여기서 중간재 투입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기타의 함수는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문은 소득을 국내재와 수입재의 소비, 정부지출, 저축 등에 지출하며 이를 통해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총효용함수는 Cobb-Douglas 함수형태를 취한다고 가정한다. 특이한 것은 가계소비는 생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재와 수입재의 CES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국내소비자가 국내생산 및 소비재(domestically produced and used goods)를 수입 및 수출재(commodities imported and exported)의 불완전 대체재(imperfect substitutes)로 본다는 가정하에 성립된다¹⁴⁾.

한편 시장균형조건은 재화 및 생산요소 등이 초과수요나 초과공급 없이 모형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급된 재화와 생산요소는 모두 수요되며 이에 따라 국내 순저축은 해외 순수출과 일치되게 된다. 즉,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S - I \equiv X - M$ 의 항등식이 성립되며 세계 전체로 볼 때 무역수지 흑자는 발생하지 않아서 각국의 흑자 또는 적자를 합산하면 영(zero)이 된다.

14) 이를 국제무역론에서는 아밍턴 가정(Armington Assumption)이라고 부른다. Armington 탄성치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Reinert and Roland-Holst(1992)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분석자료

가.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가장 최근에 발표된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Database 버전 7.0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2004년 세계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GTAP 버전 7.0은 226개 국가를 포함하는 113개 국가(군), 57개 산업, 2004년도의 글로벌 사회회계행렬(Global SAM)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균형 분석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이다. GTAP Database는 각 국가의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와 국가 간 산업별 무역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나. 국가 분류

FTA로 인한 관세구조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함에 있어 세계 각국의 경제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 또는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즉, 국가 분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ASEAN, 미국, EU 및 기타국가로 총 7개 국가 또는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나타나는 관세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하였거나 혹은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위에서 언급한 주요 국가를 비롯한 7개 국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분석 결과가 약간 과대 혹은 과소 계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IV-1〉 국가분류

	국가 혹은 지역
1	한국
2	일본
3	중국
4	ASEAN
5	미국
6	EU
7	기타국가

다. 산업 분류

본 연구에서의 산업 구분은 15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즉, 각국 경제를 곡물, 축산물, 산림, 수산업, 광물, 가공식품, 섬유 및 의복, 화학, 철강 및 금속,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전기 및 전자, 기타제조업 및 서비스 등 15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가공식품에는 유지류, 식품, 음료 및 담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제조업에는 가죽제품, 목제품, 종이·인쇄 및 광물제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건설, 수송·통신서비스, 사업·금융서비스, 도소매업, 전기·가스·수도서비스, 국방·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¹⁵⁾.

15) 제Ⅳ장에서 분류하는 산업 구분과 앞선 제Ⅲ장에서 분류한 산업 구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통계자료의 출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제Ⅳ장에서는 CGE분석에 적합한 GTAP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제Ⅲ장에서 산업별 분석에서는 MTI 분류에 의해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IV-2〉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표

No.	산 업
1	곡물
2	축산물
3	산림
6	수산물
5	광물
6	가공식품
7	섬유 및 의류
8	화학
9	철강 및 금속
10	자동차
11	기타 운송장비
12	전기 및 전자
13	기계
14	기타 제조업
15	서비스업

3. 시나리오의 설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나타나는 관세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예를 들어 이미 FTA를 체결하고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및 EU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가 철폐됨으로 인해 일본, 중국, ASEAN 및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무역전환효과는

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비효율적인 생산자로의 수입이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후생의 감소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반적인 대외관세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맺고 있는 FTA로 인한 관세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관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아직 비준단계에 있는 한미 FTA 및 한EU FTA가 곧 발효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대외관세율의 적절한 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모든 산업의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10%, 20%, 그리고 40% 감축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시나리오 A: 관세율 10% 일괄 감축], [시나리오 B: 관세율 20% 일괄 감축], 그리고 [시나리오 C: 관세율 40% 일괄 감축]).

한편,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해 나타나는 무역전환효과는 산업별로 각기 상이하다. 어떤 산업은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또 일부 산업은 무역전환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전체 무역전환효과에서 각 산업의 무역전환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업별로 제3국에 대한 관세율 감축 정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각각의 기본 시나리오 (시나리오 A, B, C)에 대해서 산업별로 차별적 관세 감축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추가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차별적인 관세율 감축을 고려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A-1], [시나리오 B-1], 그리고 [시나리오 C-1]이다. 즉 [시나리오 A-1], [시나리오 B-1], 그리고 [시나리오 C-1]는 전체적으로는 관세율을 10%, 20%, 그리고 40% 감축하되 각 산업별로 차별적인 관세 감축을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시나리오는 한미 FTA 및 한EU FTA가 동시에 발효된

다고 가정한다. 즉,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해 미국과 EU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고, 일본, 중국 및 기타 국가들에 대해서는 각 시나리오에 따라 부분적으로 감축한다.

〈표 IV-3〉 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 A	관세율 일괄 10% 감축
시나리오 A-1	산업별 차별적 관세율 감축(전체 10% 감축)
시나리오 B	관세율 일괄 20% 감축
시나리오 B-1	산업별 차별적 관세율 감축(전체 20% 감축)
시나리오 C	관세율 일괄 40% 감축
시나리오 C-1	산업별 차별적 관세율 감축(전체 40% 감축)

4. 추정 결과

가.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한미 FTA 및 한EU FTA에 따른 파급효과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미국, EU, ASEAN,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CGE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표 IV-4〉에서 보듯이 한미 및 한EU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후생은 약 0.27%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⁶⁾. 또한 한미 및 한EU FTA로 인해 미국과 EU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증가하게 되는 반면 일본, 중국 등과의 무역은 줄어들므로써 일본, 중국, ASEAN 국가들의 후생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후생 증가분을 후생 평가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6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16) 이 효과는 지적인 바와 같이 정태효과에 의한 결과이며 동태효과 및 생산성 증대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훨씬 커지게 된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07, 2010) 참조.

분석된다.

FTA로 인한 후생 변화의 요인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역조건 효과 및 저축·투자 효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결과는 <표 IV-5>에 요약되어 있다. 본 연구에 이용된 CGE 모형은 세계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모형이며,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저축이 투자에 비해 많은 국가는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 세계은행을 통해 빌려주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저축·투자 효과이다. 한미 및 한EU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후생의 변화 요인은 대부분이 교역조건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분석은 관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태효과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FTA에 의한 경쟁 제고효과라든지 생산성 증가효과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수치들이다. 만약 이들 효과까지 모두 고려한 동태모형에 의한 생산성 증가까지 감안할 경우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한 후생의 증가는 교역조건의 변화에 의한 것보다 생산성 증가라든지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의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IV-4> 한미 및 한EU FTA의 파급효과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한국	1,607.6	0.27	3.33	4.95
일본	-657.0	-0.02	-0.06	-0.27
중국	-745.5	-0.05	-0.18	-0.20
ASEAN	-322.9	-0.05	-0.08	-0.11
미국	1,079.6	0.01	0.46	0.31
EU	229.0	0.00	0.06	0.05
기타	-1,466.5	-0.02	-0.07	-0.13

〈표 IV-5〉 한미 및 한EU FTA의 후생 변화 요인 분석

(단위: 백만달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교역조건의 변화	저축-투자 효과	총계
한국	390.3	1,640.7	-423.1	1,607.8
일본	-118.4	-634.5	95.9	-657
중국	-233	-548.2	35.7	-745.5
ASEAN	-64.7	-288.8	30.6	-322.9
미국	-81.7	927.7	233.5	1,079.6
EU	-42.6	301.8	-30.2	229
기타	-120.4	-1,405.2	59.1	-1,466.5
전체	-270.4	-6.4	1.4	-275.5

나. 무역전환효과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미 FTA 및 한EU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 EU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그대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던 품목들이 미국 및 EU로 전환되는 수입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한미 FTA 및 한EU FTA에 따른 수입전환효과를 각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가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IV-6〉에서 보듯이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는 금액에서뿐만 아니라 산업별 비중 면에서 모두 기계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산업별 교역구조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기계류에 대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기계산업 다음으로 상당한 양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는 산업으로는 화학, 가공식품, 그리고 곡물 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기전

자, 자동차, 철강 및 금속 등 현재 우리나라가 상당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기계 산업의 경우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가 약 24억달러에 달해 현재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 미국과 EU를 제외한 많은 국가가 손실을 감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약 17억 달러, 가공식품의 경우 약 14억달러, 그리고 곡물의 경우 약 12억달러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IV-6〉 한미 및 한EU FTA의 무역전환효과

(단위: 백만달러)

산업	무역전환효과	산업별 비중
곡물	-1,156.9	0.14
축산물	-517.0	0.06
산림	-10.0	0.00
수산물	-11.2	0.00
광물	-257.1	0.03
가공식품	-1,425.5	0.17
섬유 및 의류	-9.0	0.00
화학	-1676	0.20
철강 및 금속	-453.3	0.05
자동차	-119.6	0.01
기타 운송장비	-31.7	0.00
전기 및 전자	-7.0	0.00
기계	-2,394.6	0.29
기타 제조업	-241.2	0.03
총계	-8,296.1	1.00

다.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무역전환효과는 국제무역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통합으로 인해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가로부터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가로 상품의 생산이 이동되는 것이다.” 즉, 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비효율적인 생산자로 수입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FTA를 맺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이러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관세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정한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나라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10% 감축한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 A]와 관세율을 10% 감축한 다음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해 나타나는 무역전환효과를 각 산업별로 고려한 [시나리오 A-1]의 분석결과가 각각 <표 IV-7>과 <표 IV-8>에 나타나 있다.

<표 IV-7> 관세인하 파급효과(시나리오 A: 10% 감축)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한국	1,891.7	0.32	3.55	5.35
일본	-524.2	-0.01	-0.03	-0.23
중국	-657.5	-0.04	-0.15	-0.17
ASEAN	-305.4	-0.04	-0.07	-0.11
미국	924.5	0.01	0.43	0.28
EU	98.3	0.00	0.05	0.04
기타	-1,334.6	-0.02	-0.07	-0.13

〈표 IV-8〉 관세인하 파급효과(시나리오 A-1)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한국	2,063.7	0.35	3.86	5.85
일본	-259.6	-0.01	0.03	-0.14
중국	-595.4	-0.04	-0.14	-0.16
ASEAN	-286.8	-0.04	-0.07	-0.10
미국	741.6	0.01	0.41	0.25
EU	-36.0	0.00	0.04	0.03
기타	-1,245.1	-0.02	-0.07	-0.12

이 표에서 보듯이 이 2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관세를 감축할 경우의 효과가 약간 큼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10% 감축한 [시나리오 A]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3.55%와 5.35%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후생은 약 0.32% 증가함으로써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9억달러의 추가적인 후생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괄적인 관세 10% 감축에 더하여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해 나타나는 무역전환효과를 산업별로 가중치를 주어 시나리오를 작성한 [시나리오 A-1]에 의하면 일괄적인 10% 관세 감축 [시나리오 A]에 비하여 수출, 수입, 후생 등 모든 면에서 약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역전환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미 FTA 및 한EU FTA 등에 의한 무역전환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산업별로 관세 감축을 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일괄적인 관세 감축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수입 변화를 보면, [시나리오 A]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

입이 0.28% 증가하는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0.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전환효과를 산업별로 가중치를 주어 시나리오를 작성한 [시나리오 A-1]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0.25% 증가로 [시나리오 A]에 비해 증가폭이 약간 감소하는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0.14%로 [시나리오 A]에 비해 감소폭이 0.09% 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산업별 관세율을 조정할 경우 일본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B]와 [시나리오 B-1]은 관세 감축을 10%가 아닌 20%로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특히 [시나리오 B-1]은 앞의 [시나리오 A-1]과 마찬가지로 산업별로 다른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가정하지 않았고 현실적인 정책적 제약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율을 낮출수록 우리나라 후생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A-1]에 비하여 더 좋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10% 관세 감축의 경우 약 0.32%~0.35%의 추가적인 후생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20%의 관세 감축의 경우에는 약 0.37~0.41%의 후생 증가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하여 산업별로 관세를 감축한 [시나리오 A-1]의 후생 증가와 관세를 20% 감축한 [시나리오 B]의 후생 증가가 각각 0.35%와 0.37%로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FTA에 따른 관세율 조정은 관세율 수준의 인하도 중요하지만 무역전환효과 등 FTA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둘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나라 수입 변화가 있다. [시나리오 B]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0.26% 증가하는 반면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전환효과를 산업별로 가중치를 주어 시나리오를 작성한 [시나리오 B-1]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0.19% 증가로 [시나리오 B]에 비해 증

가폭이 약간 감소하는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0.01%로 [시나리오 B]에서 나타났던 수입 감소 효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로부터의 수입이 -0.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과 EU의 수입이 FTA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의 분석에 의하면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해 나타나는 무역전환효과는 일본으로부터의 발생하는 부분이 크고, 관세율 인하를 통해 이를 거의 대부분 제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로 인해 EU의 후생변화는 음(-)의 값으로 후생이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후생변화는 양(+)의 값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본과 EU로부터의 수입이 FTA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FTA 체결의 의미가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표 IV-9〉 관세인하 파급효과(시나리오 B: 20% 감축)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한국	2,179.1	0.37	3.78	5.76
일본	-387.3	-0.01	0.00	-0.18
중국	-567.2	-0.04	-0.13	-0.14
ASEAN	-286.1	-0.04	-0.07	-0.10
미국	766.2	0.01	0.41	0.26
EU	-33.6	0.00	0.04	0.03
기타	-1,200.5	-0.02	-0.06	-0.12

〈표 IV-10〉 관세인하 파급효과(시나리오 B-1)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한국	2,452.2	0.41	4.48	6.89
일본	176.7	0.00	0.13	0.01
중국	-429.6	-0.03	-0.10	-0.13
ASEAN	-242.3	-0.04	-0.05	-0.10
미국	384.5	0.00	0.35	0.19
EU	-317.8	0.00	0.03	0.01
기타	-1,010.6	-0.01	-0.06	-0.12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40% 감축한 [시나리오 C]와 [시나리오 C-1]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IV-11〉과 〈표 IV-12〉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도 물론 [시나리오 C-1]는 관세를 전체적으로 40% 감축 하되 산업별로 다른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는 시나리오다. 앞서도 언급 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가정하지 않았고 현실적인 정책적 제약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율을 낮출수록 우리나라 후생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시나리오 C]와 [시나리오 C-1]는 앞선 시나리오들에 비해 큰 폭으로 관세를 인하하였기 때문에 앞선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훨씬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나라 수입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입 변화를 살펴보면, [시나리오 C]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0.20% 증가하는 반면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시나리오들에 비해 일본과 중국 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그러나 무역전환효과를 산업 별로 가중치를 주어 시나리오를 작성한 [시나리오 C-1]에서는 미국의

로부터의 수입이 0.10% 증가로 [시나리오 C]에 비해 증가폭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0.15%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를 체결한 EU로부터의 수입이 -0.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로 인해 EU로 전환되었던 수입이 관세율 인하를 통해 FTA 이전으로 전환된 듯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런 변화는 각국의 후생 변화에서도 나타나는데, EU와 미국의 후생 변화는 음(-)의 값으로 후생이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후생 변화는 양(+)의 값으로 증가하고 있어 큰 폭의 관세율 조정을 통해 일본이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큰 폭의 관세율 인하는 미국과 EU로부터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미 FTA 및 한EU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EU와의 특혜적인 교역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가 관세를 큰 폭으로 인하하여 FTA 체결국들과의 교역이 감소하고 후생도 감소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통상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미국과 EU와 FTA를 체결한 의도가 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IV-11〉 관세인하 파급효과(시나리오 C: 40% 감축)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한국	2,754.9	0.46	4.27	6.64
일본	-100.6	0.00	0.06	-0.09
중국	-380.0	-0.03	-0.07	-0.09
ASEAN	-239.7	-0.04	-0.05	-0.10
미국	440.0	0.00	0.36	0.20
EU	-302.3	0.00	0.03	0.02
기타	-925.1	-0.01	-0.06	-0.11

〈표 IV-12〉 관세인하 파급효과(시나리오 C-1)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한국	3,278.1	0.55	5.01	8.00
일본	623.1	0.02	0.23	0.15
중국	-233.5	-0.02	-0.02	-0.07
ASEAN	-99.9	-0.01	0.03	-0.05
미국	-51.4	0.00	0.27	0.10
EU	-606.4	-0.01	0.02	-0.01
기타	-681.3	-0.01	-0.04	-0.10

〈표 IV-4〉에 나타나 있듯이 한미 FTA 및 한EU FTA 이후 역외국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후생효과는 0.2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앞의 시나리오 분석과 같이 한미 FTA 및 한EU FTA 발효 이후 역외국에 대한 관세를 감축하게 될 경우 후생 증가 효과는 0.32~0.55%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FTA 및 한EU FTA의 발효는 필연적으로 일본, 중국 등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는 무역전환효과를 낳게 되는데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를 감축해 줌으로써 이러한 무역전환효과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⁷⁾.

17) 앞서 보았듯이 한미 및 한EU FTA 발효로 후생증가가 0.27%이며, 부록의 표에서 보듯이 FTA 체결 없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관세율을 시나리오별로 인하할 경우 후생증가는 0.03%~0.10% 추정됨을 감안할 때 FTA 발효와 함께 관세율 수준을 조정할 때 더 큰 후생증가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시나리오별 후생변화 요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IV-13>에서 나타나 있다¹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정태모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생 변화는 교역조건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 B-1]과 [시나리오 C-1]의 경우 교역조건의 변화에 의한 요인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산업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가중치를 주어 최대한 무역전환효과가 적게 나타나도록 조정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인 생산을 최대로 줄여주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산업별로 다른 가중치를 두지 않고 일괄적인 40% 관세 감축을 가정한 [시나리오 C]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에 의한 효과가 교역조건의 변화에 의한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관세 감축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의 특성상 개방의 폭이 크면 클수록 국제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IV-13>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후생 변화 요인 분석

(단위: 백만달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교역조건의 변화	저축-투자 효과	총계
시나리오 A	788.5	1,534.4	-431.2	1,891.7
시나리오 A-1	1,079.6	1,403.7	-419.7	2,063.7
시나리오 B	1,195.0	1,423.2	-439.2	2,179.1
시나리오 B-1	1,743.3	1,121.5	-412.7	2,452.2
시나리오 C	2,027.8	1,180.9	-453.9	2,754.9
시나리오 C-1	2,916.5	780.0	-417.9	3,278.6

18) 보다 자세한 각국별 후생변화요인은 부록에 있다.

종합하면 한미 FTA 및 한EU FTA가 발효되었다는 가정 아래 우리나라 관세율을 재조정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가정하지 않았고 현실적인 정책적 제약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율을 낮출수록 우리나라 후생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하여 산업별로 관세를 감축한 [시나리오 A-1]의 후생 증가와 관세를 20% 감축한 [시나리오 B]의 후생 증가가 각각 0.35%와 0.37%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FTA에 따른 관세율 조정은 관세율 수준의 인하도 중요하지만 무역전환효과 등 FTA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둘 때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괄적인 관세 감축보다는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하여 산업별 관세 감축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이루어지고 특히, 관세율을 40% 감축하였을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0.15% 증가하는 것에 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10% 증가하고 FTA를 체결한 EU로부터의 수입은 -0.01%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로 인해 EU로 전환되었던 수입이 관세율 인하를 통해 FTA 이전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큰 폭의 관세율 인하는 미국과 EU로부터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서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괄적인 관세 감축과 비교해서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한 산업별 관세감축 시나리오에서의 후생 수준 변화는 약 0.03~0.04%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생 수준의 변화폭이 크지 않아 중심관세율과 차등 관세율 논쟁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관세율 변화보다는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면서 중심관세율 구조의 장점을 활용하여 개별 산업별 무역전환효과를 감안한 일부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표 IV-14〉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시나리오 A	1,891.7	0.32	3.55	5.35
시나리오 A-1	2,063.7	0.35	3.86	5.85
시나리오 B	2,179.1	0.37	3.78	5.76
시나리오 B-1	2,452.2	0.41	4.48	6.89
시나리오 C	2,754.9	0.46	4.27	6.64
시나리오 C-1	3,278.1	0.55	5.01	8.00

〈표 IV-15〉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시나리오 A	-524.2	-0.01	-0.03	-0.23
시나리오 A-1	-259.6	-0.01	0.03	-0.14
시나리오 B	-387.3	-0.01	0.00	-0.18
시나리오 B-1	176.7	0.00	0.13	0.01
시나리오 C	-100.6	0.00	0.06	-0.09
시나리오 C-1	623.1	0.02	0.23	0.15

주: 여기서 수출과 수입은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과 수입을 의미함.

〈표 IV-16〉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시나리오 A	924.5	0.01	0.43	0.28
시나리오 A-1	741.6	0.01	0.41	0.25
시나리오 B	766.2	0.01	0.41	0.26
시나리오 B-1	384.5	0.00	0.35	0.19
시나리오 C	440.0	0.00	0.36	0.20
시나리오 C-1	-51.4	0.00	0.27	0.10

주: 여기서 수출과 수입은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과 수입을 의미함.

〈표 IV-17〉 EU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시나리오 A	98.3	0.00	0.05	0.04
시나리오 A-1	-36.0	0.00	0.04	0.03
시나리오 B	-33.6	0.00	0.04	0.03
시나리오 B-1	-317.8	0.00	0.03	0.01
시나리오 C	-302.3	0.00	0.03	0.02
시나리오 C-1	-606.4	-0.01	0.02	-0.01

주: 여기서 수출과 수입은 우리나라의 대EU 수출과 수입을 의미함.

〈표 IV-18〉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시나리오 A	-657.5	-0.04	-0.15	-0.17
시나리오 A-1	-595.4	-0.04	-0.14	-0.16
시나리오 B	-567.2	-0.04	-0.13	-0.14
시나리오 B-1	-429.6	-0.03	-0.10	-0.13
시나리오 C	-380.0	-0.03	-0.07	-0.09
시나리오 C-1	-233.5	-0.02	-0.02	-0.07

주: 여기서 수출과 수입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을 의미함.

라. 산업 생산의 변화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별로 산업 생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하여 기타운송장비, 기계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곡물, 축산물 등의 산업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들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관세를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 즉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전기 및 전자산업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관세를 감축하게 될 경우 그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커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기 및 전자산업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산업 영향은 단지 0.2% 증가에 그치지만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를 10% 감축할 경우(시나리오 A와 A-1) 그 효과가 0.4~1.5%로 증가하며 역외국에 대한 감

축폭을 20%로 확대할 경우(시나리오 B와 B-1) 그 영향은 0.7~2.9%로, 그리고 역외국에 대한 감축폭을 40%로 확대할 경우(시나리오 C와 C-1) 1.2~3.4%까지 크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표 IV-19〉 우리나라 산업 생산의 변화

(단위: %)

	한미 및 현EU FTA	시나리오 A	시나리오 A-1	시나리오 B	시나리오 B-1	시나리오 C-1	시나리오 C-1
곡물	-2.85	-3.17	-3.57	-3.55	-4.59	-4.58	-8.38
축산물	-2.67	-2.77	-2.47	-2.87	-2.09	-3.05	-0.24
산림	-1.24	-1.38	-1.35	-1.51	-1.47	-1.79	-1.62
수산물	0.52	0.48	0.85	0.46	1.34	0.57	3.21
광물	-1.36	-2.57	-1.73	-3.71	-1.78	-5.72	0.74
가공식품	-2.31	-2.33	-2.47	-2.33	-2.55	-2.22	-2.02
섬유 및 의류	17.01	17.28	17.21	17.58	17.49	18.31	18.94
화학	-0.37	-0.28	-0.61	-0.19	-0.86	0.00	-1.05
철강 및 금속	-2.53	-2.72	-2.88	-2.92	-3.26	-3.33	-3.71
자동차	8.42	8.43	8.45	8.44	8.48	8.45	8.51
기타 운송장비	-3.69	-3.72	-3.54	-3.76	-3.36	-3.85	-3.57
전기 및 전자	0.2	0.44	1.47	0.69	2.91	1.20	3.35
기계	-3.01	-3.21	-3.64	-3.42	-4.33	-3.87	-4.73
기타 제조업	-0.43	-0.56	-0.55	-0.68	-0.68	-0.94	-0.75
서비스	0.03	0.06	0.08	0.09	0.13	0.16	0.25

5. 결과 해석시 유의점

지금까지 한미 FTA 및 한EU FTA가 발효되었다는 가정 아래 역외국에 대한 관세를 감축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한 다음 CGE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기본적으로 정태 모형으로서 FTA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 중 무역자유화에 따른 정태효과만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 효과는 이러한 정태효과보다 오히려 동태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Balassa(1974)의 연구에서는 유럽공동체(EC)의 경우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에 의한 정태적인 후생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 기술개발에 대한 자극 및 투자에 대한 자극, 그리고 시장의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 등 동태적인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상기 분석된 결과는 상당히 과소 계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산출된 수치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결과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미 FTA 및 한EU FTA가 발효되었을 경우의 최적 관세율 수준은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CGE 모형 분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경쟁 심화, 생산성 증대 등 앞서 언급한 다양한 FTA 효과를 동태적으로 감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적 관세율을 제시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태적인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동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한 관세 효과만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분석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FTA 정책에 대응한 적절한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FTA는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충격이다. 우리나라 관세율이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가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과 일반 실행세율과의 조화를 위한 관세율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거대경제권이며 우리나라와도 교역이 활발한 미국, EU와 FTA를 체결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미 FTA와 한 EU FTA 발효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보다 우리나라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EU와 FTA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이론적으로 FTA 체결 이후 FTA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관세(external tariff)를 낮추는 것이 최적의 관세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관세수입에 대한 경쟁, 생산자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해 결국 대외관세를 낮춤으로써 무역전환효과를 줄여 국가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Bagwell and Staiger(1997)는 이런 효과를 tariff complementarity effect로 명명하였고, 특히, 대외관세를 낮추는 tariff complementarity effect는 관세동맹(CU)보다는 FTA에서 더욱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FTA가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FTA 이후 자국의 관세율을 조정할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FTA 체결에 적극적이고 지역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교역비중이 80%를 넘고 있는 칠레의 경우 그동안 7% 균등관세율을 부과하다가 2003년에 관세율

을 6%로 1%포인트 인하하였다. 그 밖에 미국,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 중 전체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한 국가는 없다. 그 이유는 FTA 체결국들과의 교역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미국은 NAFTA 체결 당시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효과인지 구분이 불분명하다. 또한 현재 DDA 협상이 진행중인 것도 중요한 이유로 생각된다. 현재 DDA협상의 지지부진함을 FTA 추진으로 충족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직 자국의 교역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과의 FTA가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DDA협상 이후 관세율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세를 인하하기보다는 DDA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으로 추측된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구조 변화 논의에 앞서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를 현재와 같이 중심관세율 구조로 유지할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후생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무세화를 비롯해서 큰 폭의 관세율 변화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관세율 변화로 얻어지는 후생증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체계의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자원배분에도 변화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심관세율 체계에서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이행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 특징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들 간의 수출입 구조와 무역수지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산업별 수출입 구조 변화와 함께 산업별 세부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비중 변화 추세를 분석하여 향후 발효될

FTA가 이들 국가의 산업별 수입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교역구조는 크게 변화했다. 주요 교역품목이 변화하였고, 국가별로는 중국과의 교역 증가가 두드러졌고 이에 따른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 감소,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확대 등의 특징이 보인다. 반면 EU와의 교역비중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한미 FTA의 체결은 이러한 교역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에 대한 교역비중이 증가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성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특히, 노동집약적인 섬유류와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에서도 중국의 수입비중이 증가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수입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품목의 EU로부터의 수입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품목 또는 품질 등을 이유로 EU로부터의 수입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산업들로는 기계류에서는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등이 있고, 전자전기제품에서는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전선 등이 있고, 철강제품에는 기타철강금속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정밀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중국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미국의 수입비중 감소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를 통해 이들 품목의 수입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FTA로 인해 저비용 국가에서 보다 고비용 국가로 바뀌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외관세를 낮춰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동일하게 지난 10여 년간 대EU 수입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

EU FTA가 발효된다면 미국과 달리 무역전환효과보다는 무역창출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예를 들어 기계류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비중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전자전기제품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강제품과 화학공업제품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기타기계류의 수입비중은 63.5%에서 23.5%로 크게 감소하였다. 기타기계류의 수입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EU는 30.2%, 미국은 18.4%, 중국은 6.3%로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더 감소할 여지가 있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나머지 기계류에서도 EU 수입비중이 미국과 달리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보다 빠르게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적자 규모 감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적 분석과 함께 관세율 구조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10%, 20%, 그리고 40% 인하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였고, 덧붙여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해 나타내는 무역전환효과를 감안하여 전체적으로는 관세율을 10%, 20%, 그리고 40% 인하하되 산업별로 무역전환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차별적 관세 감축을 실시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우선 한미 FTA 및 한EU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계산업에서의 무역전환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화학, 가공식품, 그리고 곡물산업에서 상당한 양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산업별 교역구조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기계류에 대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미 FTA 및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에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후생은 0.27% 증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31%, EU로부터의 수입은 0.0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0.27%,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산업별 분석에서 예측한 대로 결과가 도출되었다¹⁹⁾.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세율을 10%, 20%, 그리고 40% 인하하였을 경우 관세 인하폭이 클수록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후생 증가는 당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그러나 관세 감축폭이 크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후생의 변화는 관세를 10%에서 20%로 감축할 경우 약 0.32%~0.35%에서 약 0.37%~0.41%로, 또한 관세를 40%로 감축할 경우 약 0.46%~0.55%로 변화하여 큰 관세 감축폭에 비해 후생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또한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하여 산업별로 관세를 10% 감축한 [시나리오 A-1]의 후생 증가와 관세를 20% 감축한 [시나리오 B]의 후생 증가가 각각 0.35%와 0.37%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FTA에 따른 관세율 조정은 관세율 수준의 인하도 중요하지만 무역전환효과 등 FTA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둘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괄적인 관세 감축보다는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하여 산업별 관세 감축이 경제적으로 보다 효과적이었지만, 이럴 경우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이루어지고 특히, 관세율을 40% 감축하였을 경우에는

19)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 효과는 정태효과에 의한 결과이며 생산성 증대효과와 함께 동태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훨씬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태분석을 실시하였다.

2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가정하지 않았고 현실적인 정책적 제약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율을 낮출수록 우리나라 후생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0.15% 증가하는 것에 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10% 증가하고 FTA를 체결한 EU로부터의 수입은 -0.01%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를 체결한 미국과 EU로부터의 수입보다 오히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EU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의 수출이 FTA 이전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큰 폭의 관세율 인하는 미국과 EU로부터의 불만을 제기시킬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서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미 FTA 및 한EU FTA 이후 관세율을 40%처럼 크게 낮추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²¹⁾. 한편, 일괄적인 관세 감축과 비교해서 무역전환 효과를 고려한 산업별 관세 감축 시나리오에서의 후생 수준 변화는 약 0.03~0.04%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생 수준의 변화폭이 크지 않아 중심관세율과 차등관세율 논쟁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급격한 관세율 변화보다는 중심 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면서 중심관세율 구조의 장점을 활용하여 FTA 체결에 따른 개별 산업별 무역전환효과를 감안한 일부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및 한EU FTA가 발효되었다는 가정 아래 CGE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산출된 수치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결과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강조해 둔다. 본 연구는 FTA 체결 이후의 관세율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태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FTA 발효로 인한 경쟁의 심화, 기술

21) 20% 관세 감축과 함께 산업별 관세율을 조정한 [시나리오 B-I]에서도 일본과 EU로부터의 수입이 FTA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FTA 체결의 의미가 약해지는 측면이 있다.

개발에 대한 자극 및 투자에 대한 자극, 그리고 시장의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 등 동태적인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고려한 동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관세 효과만을 살펴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동태적인 효과분석을 배제한 분석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한미 FTA 및 한EU FTA가 발효되었을 경우의 최적 관세율 수준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CGE 모형 분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FTA 효과를 동태적으로 감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적 관세율을 제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FTA는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정책이지만, FTA시대에도 관세율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다수의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FTA 체결국이더라도 해당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의 관세율은 향후 WTO 관세인하협상에서 협상의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됨을 항상 감안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FTA 정책과 함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관세율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홍,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관세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8.
- 김기홍·이창수·김균태·강준구·박순찬,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0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200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박상태, 『한국 관세율체계의 적정성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 박순찬·강문성,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 0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이원영, 『한국경제의 산업무역모형』, 한국개발연구원, 1992.
- 이흥구, 『불완전경쟁하에서의 무역장벽 완화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정인교,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정인교·조정란 『한-EU FTA의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7.
- 정재호, 『자유무역협정하에서의 최적관세: 소국과 대국의 경우』, 『재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2000.

- 정재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유인: Grossman & Helpman 모형의 일반화』, 『재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정재호,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제84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정재호·성명재·이명현,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계산모형의 응용』,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정재호·박순찬,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정재호,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일반균형계산(CGE)모형 이용』,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최낙균 외, 『UR 이후 저관세율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방향』, 산업연구원, 1993.
- 최낙균·이홍식 외,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07-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2009년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전망』, 2009.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호.

- Armington, P.,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MF Staff Papers, 15, 1969, pp. 159~178.
- Bachrach, C. and L. Mizrahi., "The Economic Impact of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A CGE Analysis," Unpublished Manuscript, KPMG Peat Marwich, 1992.
- Bagwell, K. and R. Staiger, "Regionalism and Multilateral Tariff Cooperation," NBER Working Paper 5921, 1997.
- Baldwin, R., "Growth Effects of 1992," *Economic Policy*, 9, 1989, pp. 247~282.

- Baldwin, R., "Measurable Dynamic Gains from Tra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 No. 1, 1992, pp. 162~174.
- Bond, E., R. Riezman and C. Syropoulos, "A Strategic and Welfare Theoretic Analysis of Free Trade Area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4, 2004, pp. 1~27.
- Brown, D. K., A. V. Deardorff, and R. M. Stern., "Computational Analysis of Multilateral Trade Liberalisation in the Uruguay Round and Doha Development Round," Discussion Paper No. 489, Research Seminar in International Economics,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United States, 2002, <http://www.spp.umich.edu/rsie/workingpapers/wp.html>.
- Brown, Drusilla K., Alan V. Deardorff, and Robert M. Stern, "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ssues and a Computational Assessment," *The World Economy*, 15, 1992, pp. 15~29.
- Chenery, H. B., J. Lewis, J. de Melo, and S. Robinson, Alternative Routes to Development, in Chenery, H.B. and alii editors,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 a Comparative Study, 1986.
- Cheong, I. and Y. Wang,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Working Paper 99-03,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999.
- de Melo, J.,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for Trade Policy Analysis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Journal of Policy Modeling*, 10, 1988, pp. 469~504.
- Deardorff, A. V. and R. M. Stern, *The Michigan Model of World Production and Trade*, Cambridge, Mass, 1986.
- Decaluwe, B. and & A. Martens, "CGE Modeling and Developing Economies: A Concise Empirical Survey of 73 Applications to 26 Countries," *Journal of Policy Modeling*, Elsevier, Vol. 10(4),

- 1988, pp. 529~568.
- Dervis, K., de Melo, and S. Robinson, *General Equilibrium Models for Development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2.
- Francois, J., "The Motor Vehicle Sector in China and WTO Accession," paper prepared for the third project meeting on WTO Accession, Policy Reform and Poverty Reduction in China, World Bank Resident Mission, Beijing, 2002, June, pp. 26~28.
- Francois, J. F., B. McDonald, and H. Nordstrom, Assessing the Uruguay Round, in Martin, W., Winters, L.A. (Eds), *The Uruguay Round and the Developing Economies*, Discussion Paper 307, World Bank, Washington, DC, 1995, pp. 117~214.
- Francois, Joseph and Brad McDonald, "Liberaliz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in the GTAP Model," GTAP Technical Paper No. 07, 1996.
- Goldin, I. and Dominique van der Mensbrugghe, "Trade Liberalization: What's at Stake?," OECD Development Centre, Policy Brief No. 5, Paris, 1992.
- Hertel, T.W., (ed.) *Global Trade Analysis: Modeling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Jones, Rich, Trien T. Nguyen, and John Whalley, "Computation of a World General Equilibrium under Bilateral Quotas and an Application to the Analysis of Textile Trade Restriction," *Journal of Policy Modeling*, 12(3), 1990, pp. 511~526.
- P.B.Dixon, B.R. Parmenter, Russell J. Rimmer, "ORANI Projections of the Shortrun Effects of a 50 percent Across-the-Board Cut in Protection using Alternative Data Bases," pp. 33~60 in J.

- Whalley and T.N. Srinivasan (eds), *General Equilibrium Trade Policy Modelling*, MIT Press, Cambridge, Mass, 1986.
- Reinert, Kenneth A., Roland-Holst, and David W, "Armington Elasticities for United States Manufacturing Sectors,"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14, pp. 631~39, 1992.
- Richardson, Martin, "Endogenous Protection and Trade diver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4, 1993, pp. 309~24.
- Richardson, Martin, "Tariff Revenue Competition in a Free Trade Area," *European Economic Review*, 39, 1995, pp. 1429~37.
- Shoven, J. and J. Whalley,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s of Tax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 Introduction and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2, 1984, pp. 1007~1051.
- Shoven, J. B. and J. Whalley, *General Equilibrium Trade Policy Modelling*, MIT press, 1986.
- Smith, Alasdair and A. J. Venables, "Counting the Cost of 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in the European Car Market," CEPR Discussion Papers 249, CEPR Discussion Papers, 1988.
- Stoeckel, Andrew, David Pearce and Banks, *Western Trade Blocks*, Centr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0.
- Whalley, J., *Trade Liberalization among Major World Trading Areas*, Cambridge, MA: MIT Press, 1985.
- Whalley, John, "An Evaluation of the Recent Tokyo Round Trade Agreement Using General Equilibrium Computational Methods," *I. Policy Modeling*, 4(3), Nov. 1982, pp. 341~61.
-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IMF.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2005.
- WTO, <http://www.wto.org>

부록 1. 시나리오별 후생변화 요인 분석

〈부표 1〉 후생 변화 요인 분석(시나리오 A)

(단위: 백만달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교역조건의 변화	저축-투자효과	총계
한국	788.5	1,534.4	-431.2	1,891.7
일본	-98.8	-511.3	85.9	-524.2
중국	-238.8	-456.1	37.4	-657.5
ASEAN	-61.4	-274.8	30.8	-305.4
미국	-71.5	786.8	209.4	924.5
EU	-90.3	198.8	-10.2	98.3
기타	-130.1	-1,283.9	79.4	-1,334.6
Total	97.5	-6.0	1.5	93.0

〈부표 2〉 후생 변화 요인 분석(시나리오 A-1)

(단위: 백만달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교역조건의 변화	저축-투자효과	총계
한국	1,079.6	1,403.7	-419.7	2,063.7
일본	-64.8	-248.4	53.6	-259.6
중국	-236.8	-403.6	45.1	-595.4
ASEAN	-61.0	-255.8	30	-286.8
미국	-63.3	624.5	180.4	741.6
EU	-148.2	101.0	11.3	-36.0
기타	-119.1	-1,226.9	100.9	-1,245.1
Total	386.5	-5.6	1.5	382.4

〈부표 3〉 후생 변화 요인 분석(시나리오 B)

(단위: 백만달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교역조건의 변화	저축-투자효과	총계
한국	1,195	1,423.2	-439.2	2,179.1
일본	-79	-384.4	75.6	-387.3
중국	-246	-359.9	39.0	-567.2
ASEAN	-58	-259.1	31.1	-286.1
미국	-59	640.5	184.5	766.2
EU	-139	94.5	10.4	-33.6
기타	-140	-1,160.6	100.2	-1,200.5
Total	475	-5.7	1.6	470.7

〈부표 4〉 후생 변화 요인 분석(시나리오 B-1)

(단위: 백만달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교역조건의 변화	저축-투자효과	총계
한국	1,743.3	1,121.5	-412.7	2,452.2
일본	-5.8	175.7	6.8	176.7
중국	-246.4	-236.8	53.6	-429.6
ASEAN	-57.3	-214.7	29.8	-242.3
미국	-36.9	297.8	123.6	384.5
EU	-264.7	-108.4	55.2	-317.8
기타	-116.2	-1,039.4	145.1	-1,010.6
Total	1,016.0	-4.3	1.4	1,013.1

〈부표 5〉 후생 변화 요인 분석(시나리오 C)

(단위: 백만달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교역조건의 변화	저축-투자효과	총계
한국	2,027.8	1,180.9	-453.9	2,754.9
일본	-35.8	-119.1	54.3	-100.6
중국	-267.3	-154.0	41.3	-380.0
ASEAN	-51.3	-220.4	31.9	-239.7
미국	-25.9	333.5	132.4	440.0
EU	-237.0	-118.0	52.8	-302.3
기타	-160.4	-907.5	142.9	-925.1
Total	1,250.1	-4.6	1.6	1,247.2

〈부표 6〉 후생 변화 요인 분석(시나리오 C-1)

(단위: 백만달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교역조건의 변화	저축-투자효과	총계
한국	2,916.5	780	-417.9	3,278.6
일본	81.8	564.2	-22.9	623.1
중국	-296.8	2.9	60.4	-233.5
ASEAN	-49.5	-81.8	31.4	-99.9
미국	65.6	-163.9	46.9	-51.4
EU	-369.0	-346.7	109.2	-606.4
기타	-118.6	-756.9	194.2	-681.3
Total	2,230.0	-2.1	1.2	2,229.0

부록 2. FTA 체결 없이 관세율만을 인하한 경우

1) 10% 관세감축의 경우

〈부표 7〉 관세인하 파급효과 (10% 관세 감축)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한국	167.2	0.03	0.27	0.50
일본	132.6	0.00	0.03	0.04
중국	92.2	0.01	0.03	0.03
ASEAN	20.4	0.00	0.01	0.00
미국	-139.3	0.00	-0.02	-0.02
EU	-124.5	0.00	0.00	-0.01
기타	135.6	0.00	0.00	0.00

〈부표 8〉 후생 변화 요인 분석 (10% 관세 감축)

(단위: 백만달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교역조건의 변화	저축-투자효과	총계
한국	320.6	-148.6	-4.8	167.2
일본	19.1	123.7	-10.2	132.6
중국	-5.5	97.0	0.8	92.2
ASEAN	4.1	15.8	0.5	20.4
미국	9.1	-126.1	-22.3	-139.3
EU	-55	-87.7	18.2	-124.5
기타	-8.2	125.9	17.9	135.6
Total	284.2	0.0	0.0	284.2

2) 20% 관세감축의 경우

〈부표 9〉 관세인하 파급효과 (20% 관세 감축)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한국	324.5	0.05	0.56	1.03
일본	268.6	0.01	0.07	0.09
중국	186.5	0.01	0.06	0.05
ASEAN	42.6	0.01	0.01	0.00
미국	-279.4	0.00	-0.04	-0.05
EU	-250.9	0.00	-0.01	-0.02
기타	272.6	0.00	0.01	0.01

〈부표 10〉 후생 변화 요인 분석 (20% 관세 감축)

(단위: 백만달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교역조건 변화	저축-투자효과	총계
한국	638.6	-305.1	-9.0	324.5
일본	38.7	250.7	-20.8	268.6
중국	-12.3	197.6	1.2	186.5
ASEAN	8.3	33.3	1.0	42.6
미국	18.4	-253	-44.8	-279.4
EU	-111.5	-175.9	36.6	-250.9
기타	-15.5	252.2	35.9	272.6
Total	564.6	-0.1	0.0	564.5

3) 40% 관세감축의 경우

〈부표 11〉 관세인하 파급효과 (40% 관세 감축)

(단위: 백만달러, %)

	후생평가 금액	후생	수출	수입
한국	600.3	0.10	1.16	2.15
일본	550.6	0.01	0.14	0.17
중국	381.3	0.03	0.12	0.11
ASEAN	94.5	0.01	0.03	0.01
미국	-560.9	-0.01	-0.07	-0.10
EU	-510.2	0.00	-0.02	-0.03
기타	550.9	0.01	0.02	0.01

〈부표 12〉 후생 변화 요인 분석 (40% 관세 감축)

(단위: 백만달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교역조건 변화	저축-투자효과	총계
한국	1,261.2	-645.3	-15.5	600.3
일본	78.9	514.7	-43.1	550.6
중국	-29.7	410.0	0.9	381.3
ASEAN	16.9	75.2	2.3	94.5
미국	35.9	-506.9	-89.9	-560.9
EU	-229.8	-353.8	73.4	-510.2
기타	-26.5	505.5	71.9	550.9
Total	1,107.0	-0.7	0.0	1,106.3

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정재호 · 이흥식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FTA 정책, 특히 전 세계적으로 거대 경제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미국, EU와의 FTA 발효에 대응한 적절한 관세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가에는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조화하기 위한 관세율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교역 특징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로 인해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증가하면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가 예상되고 효율성 측면에서 관세를 낮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와의 교역비중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기 때문에 향후 한EU FTA가 발효되면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효과와 함께 무역창출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 이후 관세율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일반 균형계산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경제적 후생은 증가하지만, 관세 감축 폭에 비해 후생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한 FTA에 따른 관세율 조정은 관세율 수준의 인하도 중요하지만 무역전환효과 등 FTA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둘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급격한 관세율 변화보다는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

면서 그 장점을 활용, FTA 체결에 따른 개별 산업별 무역전환효과를 감안하여 관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제안한다.

FTA시대에도 관세율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의 FTA 미체결국에 대해 여전히 기존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또한 FTA 체결국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역시 기존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관세율은 향후 WTO 관세인하협상에서 협상의 중요한 기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FTA 정책과 함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관세율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hanges in Korean Tariff Structure under the New Free Trade Agreements

Jaeho Cheung, and Hongshik Lee

Korea has actively engaged in Free Trade Agreements(FTA) negotiations since the beginning of 2000. Currently FTAs with Chile, Singapore, EFTA, ASEAN and India have entered into force. Korea-US FTA and Korea-EU FTA was signed and waiting approval for ratification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 in Korea tariff rates after Korea-US FTA and Korea-EU FTA entering into force.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 of trade between Korea and U.S., EU, China and Japan during 20 years. Under Korea-US FTA, Korea would expect trade diversion effect with decreasing the trade volume from China and Japan. However, under Korea-EU FTA, Korea may expect trade creation effect rather than trade diversion effect.

Using CGE model,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reducing tariff rates on Korea economy under Korea-U.S. FTA and Korea-EU FTA.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would lower tariff rates under Korea-U.S. FTA and Korea-EU FTA with maintaining current tariff structure. Since 1984, Korea maintains 8% tariff rate on most of its final output. Korea would lower its tariff rate slightly, and lower especially the tariff rate of the products incurring trade diversion effect under Korea-U.S. FTA and Korea-EU FTA. Significantly reducing the tariff rates induce to decrease the trade volume from the FTA partners such as U.S. and EU.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strategy under new FTA.

〈著者略歷〉

정재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Wisconsin-Madis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研究報告書 10-03

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2010년 12월 23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이홍식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 지 사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489-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5,000원